

한옥정책,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Contents

한옥정책,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다.

1.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	06
2. 한옥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현황	09
3. 숫자로 보는 한옥 진흥 정책 성과	63

한옥정책,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다.

1. 한옥정책의 현 주소	84
2. 한옥정책이 당면할 여건 변화	106

한옥정책, 앞으로의 10년을 그리다.

1.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역할 강화, “한옥 건축이 편리해지다”	128
2. 현대건축과의 만남, “한옥의 업역을 확대하다”	133
3. 한옥 공공건축물의 보급·확산, “한옥의 체험기회를 확대하다”	140
4. 한옥건축기준 및 성능 합리화, “한옥의 품격과 품질을 제고하다”	143

부록-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

I. 계획의 기본방향	148
II. 전략별 추진과제	158
III. 실행체계	174

한옥정책,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다.

1.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
2. 한옥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현황
3. 숫자로 보는 한옥 진흥 정책 성과

10

1.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

대중문화의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미디어 매체로부터 전달되는 한국의 모습은 듣고, 보고, 먹는 관심에서 점차 확대되어 직접 만지고 느끼는 체험으로까지 연결되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고 소외되었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단순히 보존해야하는 박제된 존재가 아닌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건축·도시분야에서 한국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경관과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인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¹⁾

한옥은 자연재료인 나무와 흙이 기본재료로 구성되었으며, ‘온돌’과 ‘대청’이 공존하는 4계절에 적합한 공간구조로 동아시아 주거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문화사적 의미가 크다.²⁾ 이러한 한옥은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고유한 전통성은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점차적으로 멸실되었는데, 한류문화에 대한 기대와 삶의 질(well-being)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총 호수가 단독주택을 능가하기 시작하면서, 획일화된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실증과 친환경적인 건강한 주거생활의 요구의 대안으로서 한옥이 급부상하였다.

1) 이강민,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부동산포커스 2013년 6월호.

2) 이강민,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부동산포커스 2013년 6월호.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의 주요 흐름

출처 : 국가한옥센터(2019),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p.3.

2007 —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 발표 (2007.2)

- | 문광부, 국토부, 농림부, 외교부, 문화재청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 | 전통문화의 핵심이면서도 자생력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한 6대 분야에 대한 육성계획 수립
- | ‘한옥’이 한글·한복·한식·한지·한국음악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표상하는 산업 콘텐츠로 선정
- | 한옥과 관련된 중점 추진 과제
 - 전통한옥의 보전·관리 및 활용
 -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
 -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

2008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이 국정과제로 선정 (2008.2)

「건축기본법」 제정 및 시행 (2008.6)

- | 이 법률을 토대로 2010년 수립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한옥 관련 추진전략이 포함됨

2009 한옥기술개발을 위한 국가 R&D 추진 (2009.12)

- |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하고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여 과업 수행

2010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발표 (2010.4)

- | 계획의 추진 전략 중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에 한옥 관련 내용이 포함됨
- | 한옥과 관련된 중점 추진 과제
 - 기존 도심의 한옥지구 보전·재생 유도
 - 농어촌 한옥마을 조성
 - 한옥의 산업화와 현대화 기반 조성

‘국격향상을 위한 新(2010~2014)’ 발표 (2010.4)

- | 국건위·국토부·문광부·농림부·외교부·산림청 합동
- | 국격향상 및 녹색성장에 한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 추진전략 마련
- | 정책 부문별 전략 및 실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 보급·확산 - 기술개발 및 산업화 - 한옥 보전·관리 - 한옥의 적극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한옥 확산 한옥마을 활성화 설계·성능·시공기술 연구개발 한옥 관련 산업기반 구축 설계·시공 전문인력 양성 한옥의 멸실 방지 한옥의 보전 지원 한옥의 관광자원화 공공시설의 한옥 도입
--	--

201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 ※ 법률 제정 : 2014.6

- |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조성을 통해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발표 (2015.12)

- | 6대 실천과제 중 한옥과 특히 관련있는 과제로 ‘한옥 조성 확대’ 및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이 선정됨

이처럼 전통문화의 세계화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통문화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前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5년부터 한스타일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한옥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격향상을 위한 新 한옥플랜’을 발표하였고, 한옥이 국가 정책의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0년 2월 18일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여, 본격적인 정책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2.

한옥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현황

한옥 진흥 정책의 출발점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

한옥 진흥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0년 5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산림청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통령 보고를 한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이다. 신한옥플랜은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한옥을 보급·확산하고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여 국가 품격을 제고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한옥의 보급·확산,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한옥이 보전·관리, 한옥의 적극적 활용 4개의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였던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의 비전이었던 한옥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예정했던 2020년에 지난 10년 간 한옥 진흥 정책의 성과를 4개의 실천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실천 방안 1 : 한옥의 보급·확산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해 농어촌 한옥 확산과 한옥마을 활성화를 세부과제로 추진하였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시 한옥건축 우선 선정

개별 한옥 보급·확산과 관련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한옥 건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시 한옥주택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정책은 2000년대 이후 늘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여 한옥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신한옥플랜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실천과제 중 하나로 삼았고 마침내 201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의 우선배정 및 지역개발지역배정에 한옥 건축자 및 한옥마을 조성의 경우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운영지침에서 한옥과 관련된 내용이 제외되었으며 2019년 12월 기준으로 문경시만이 한옥 건축자를 우선배정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형태

구분	주요 내용(2012년도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	- 특별배정 : 특정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배정하는 물량(환경부 연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우선배정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배정물량(특별배정 물량 제외)의 25% 범위에서 선정가능(① 다문화 가정, ② 한옥 건축자, ③도시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④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개량자 등)
	- 지역개발지역배정 : 신규마을조성, 기존마을 리모델링 등 지역개발지역에 우선배정(①마을(자연마을, 행정리)에서 5호 이상 집단으로 경관주택 개량 희망자, ②수해지구·재해위험지구·기타 사업지구(한옥마을 조성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하고, 잔여물량 발생 시 일반배정으로 전환
	- 일반배정 : 일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배정(①주택 노후도(노후도 높을수록), ②슬레이트 주택 여부(슬레이트 주택 개량 시), ③소득수준(소득수준 낮을수록), ④신청자 연령(연령 높을수록), ⑤가족 구성원 수(가족 구성원 많을수록)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자 선정
지원형태	용자지원, 대출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재원	농협자금(정부이자보전) 5,000억 원
사업규모	10,000동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2), “2012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내부자료.

농어촌 한옥마을 조성

2010년 신한옥플랜 수립 당시 도시에 거주하던 젊은이들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던 농림수산식품부는

신한옥플랜 실천과제로 농어촌 뉴타운 내 한옥마을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단양·고창·장수·장성·화순 총 5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이 중 전남 화순군 잠정햇살마을은 전체 주택 200호 중 50호가 한옥으로 공급되었다. 농어촌 뉴타운 내 시범한옥마을 조성은 단발성 시도에 그쳤으나 아파트와 같이 선분양 방식을 채택한 시범적인 사례였다.

농어촌 뉴타운 화순 잠정지구 조성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2012년도 기준)			
지구명	전남 화순 잠정지구 농어촌 뉴타운 잠정햇살마을			
위치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33, 47번지 일원			
사업기간	2009년~2012년(4년)			
개발규모	179,540㎡ (54,310평)			
총사업비	48,997백만원 (국고보조 12,814 융자 12,560 지방비 23,623)			
공급 방식	합계	200세대		
	한옥(분양)	50세대 (100㎡)		
	타운하우스(임대)	150세대 (100㎡)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2013), 『한옥 정책·제도·사업』 p.94.

농어촌 뉴타운 화순 잠정햇살마을 전경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한옥마을이야기, p.137



전라남도는 도내 농촌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옥마을을 확산하는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한옥마을 조성 붐을 선도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 까지 활발하게 추진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마을단위의 한옥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라남도과 기초지자체가 한옥 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였다. 신규 한옥 보급을 위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한옥보존시범마을을 제외하고 기존에 어느 정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에 한옥주택을 건축하도록 장려하는 기존마을 정비형과 농림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한옥마을로 조성하도록 하는 신규마을 조성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고, 그 결과 기존마을 정비형 89개 마을 내 1,388가구, 신규마을 조성형 12개 마을 내 277가구가 완공되었거나 추진되었다(전라남도 한옥마을 홈페이지 게시 기준).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사업 초기 한옥건축 품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옥의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크며, 충청북도 등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전라남도 한옥마을(나주시 신광 행복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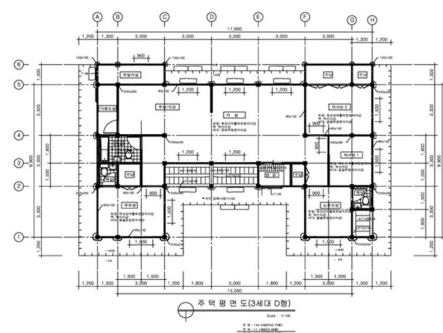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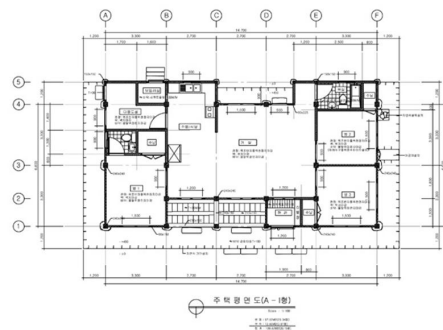


농어촌 한옥 표준설계도서 보급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경제성·실용성·전통성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도면을 기반으로 한옥 보급·확산을 도모하고자 표준설계도서를 개발 및 공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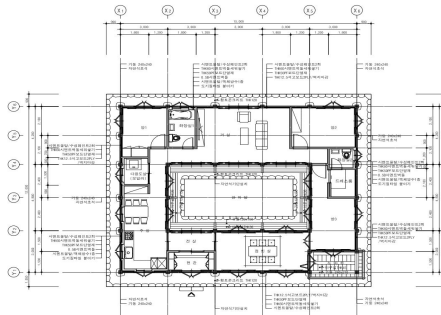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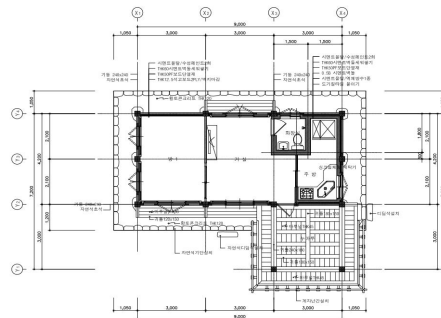
전라남도는 2007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한옥의 현대적 편의성, 경제성을 고려한 한옥 설계의 필요성에 따라 한옥표준설계도서를 개발하였다. 전남지방 전통한옥의 평면형태와 민도리 양식을 채택하고, 수납공간 확보 등 현대 생활에 적합한 한옥 건축을 위해 공간계획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제도화 된 표준설계도서로는 활용되지 못했지만 지역성을 고려한 한옥 건축의 모범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라남도 한옥표준설계도서(전라남도 한옥마을 홈페이지)



경상북도는 한옥 문화 계승·발전 및 한옥 건립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8년 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유형은 크게 전통형과 보급형이 있고, ‘一·ㄱ·ㄷ·ㄹ자형’ 등의 4가지 평면 형태에 따라 총 32가지의 세부 유형이 있다. 경북형한옥표준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받은 한옥설계도서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지진피해에 대응하여 내진 보강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설계도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상북도 한옥표준설계도서(경상북도 홈페이지)



도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계획 기준 마련

북촌과 전주한옥마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별 한옥을 신축하거나 농어촌 한옥마을 조성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지역 내 마을 단위 한옥 보급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신한옥플랜의 후속조치로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한옥마을(단지) 조성을 유도하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계획되는 주택의 범위에 ‘한옥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용지계획 시 한옥마을(단지)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속력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옥과 관련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사항

구분	국토해양부훈령 제376호('09.8.21.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601호('10.6.30.개정)
지침 내용	제16조(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③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는 택지개발계획이 정하는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단독주택,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을(이에 부수되는 입주자 전용의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16조(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③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단독주택(한옥을 포함한다),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을(이에 부수되는 입주자 전용의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다.

출처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 376호(2009.8.21. 제정), 제16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 601호(2010.6.30. 개정), 제16조.

「주택법」에서는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무주택자에 대해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따르게 되면 사업계획 수립 시 설계 도면을 확정해야 하고, 일반 공모를 통해 주택 수요자를 모집하게 되나, 한옥의 잠재 수요자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으로 미리 정해진 형태

의 주택보다는 개인별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사업추진주체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기존의 20~30세대에서 한옥의 경우 50세대로 완화되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기준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14.6.11.개정)
내용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

출처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81호, 2014. 6. 11, 일부개정)

이와 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국토교통부는 한옥마을 조성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2016년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신규 한옥마을에 초점을 맞춘 ‘한옥마을 특성 반영을 위한 신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여 전통적인 한옥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기능 요구에 만족하는 마을이 조성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 내 한옥마을 조성 시도와 성과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한옥마을을 공급하려는 시도는 2008년 LH가 의정부 민락2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한옥마을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新)한옥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한옥마을 조성 아이디어를 모았고, 이때부터 중층 한옥에 대한 구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사업성의 문제로 결국 실행되지 못하고 이후 택지개발지구 내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참고사례로 활용되었다.

의정부 민락지구 신(新)한옥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밖에도 경기도 수원시 광고신도시, 화성동탄 신도시 등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검토되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택지개발지구 내 한옥마을 조성이 추진된 곳은 서울 은평뉴타운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조성된 은평한옥마을이다. SH공사가 시행자로 나선 은평한옥마을은 부지면적 약 56,500㎡에 156개 필지로 구성되었으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한옥건축에 불리함이 없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시가 건축 설계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은평한옥마을은 사업초기에 저조했던 필지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필지면적을 줄여 비용을 감소시켰고, 그 결과 주변 주택지에 비해 저렴한 필지 분양가는 은평한옥마을을 조성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현재 은평한옥마을은 양호한 주거환경과 품격 있는 한옥주택 건축으로 획일적인 것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개성있는 주거형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유형의 하나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은평한옥마을 조감도

출처: SH공사





은평한옥마을 목경헌
(2016 올해의 한옥대상)



은평한옥마을 청인당
(2019 올해의 한옥상)



은평한옥마을 월문가
(2019 올해의 한옥대상)

은평한옥마을 조성의 성공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경북도 청신도시에도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지역 내 단독주택용지 21,625㎡에 46개 필지로 구성된 한옥마을을 계획하여 현재 한옥주택이 활발히 건축되고 있다. 세종시 한옥마을 용지는 주변 단독주택용지에 비해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하였고, 건축주는 세종시로부터 한옥 건축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용지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세종시 한옥마을은 단지계획적인 측면에서 진일보하여 한옥마을의 특성을 살린 도로 및 블록 계획과 한옥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시 한옥마을 계획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6.6), 1-1, 1-3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발췌 재구성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신도시에 추진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2016년 1단계 사업부지 면적 69,359㎡ 내 건본주택용 4필지를 제외한 69필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하고, 2단계 사업지구에 450호 가량의 대규모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옥건축 보조금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완료된 1단계 필지 대부분이 공터로 남아있다. 필지 분양 시 5년 이내 한옥을 건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북개발공사가 이를 환매하는 조건이었으나 2020년 9월 경북개발공사가 환매권을 포기하면서 한옥마을 조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한옥이 건축되지 않은 이유로 비싼 건축 비용과 신도시 내 기반시설 조성이 더디게 진행된 부분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변화 등 다각도의 원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의 한옥건본주택

출처 : 노컷뉴스(2019.8.14.), "경북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조성..."없었던 일로"



실천 방안 2 :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한옥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설계·성능·시공기술 R&D, 한옥관련 산업기반 구축, 설계·시공 전문인력 양성을 세부과제로 추진하였다.

한옥건축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한옥의 현대화를 위한 설계·성능·시공기술 연구개발은 국가 주도의 한옥 기술 R&D 사업을 통해 2009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1단계 R&D에서는 한옥 설계·시공·성능 개선을 위한 기초적·핵심적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2단계 R&D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개별 한옥에서 한옥 마을로, 주택에서 공공건축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규모와 용도에 따른 모델 개발 및 실증 구축 사업이 이루어졌다. 3단계 R&D에서는 한옥이 지닌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공간·장경간의 한옥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단계별 개요

구분	R&D 주제	추진 기간
1단계	한옥 설계·시공·성능 핵심 기술 개발	2009.12.21.~2013.09.20.
2단계	한옥마을 및 한옥형 공공건축물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 구축	2013.12.26.~2016.10.31.
3단계	10m급 대공간 한옥 설계·시공 기술 개발	2017.04.25.~2021.12.31.

한옥 기술 R&D 사업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옥기술개발연구단’ 주관으로 추진 중임
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과제현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aia.re.kr/portal/landmark/readTskList.do#none>. (검색일 : 2019.11.21)

2009년 12월 시작된 1단계 R&D에서는 기존 공사비의 60% 정도로 한옥의 거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설계·시공·성능 기술 개발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한옥 통합 시공 시스템 개발, 한(韓)스타일을 반영한 한옥 모델 개발, 한옥 성능요소 기술 개발, 한옥 통합 정보시스템 및 3차원 한옥 부재 라이브러리 구축 등의 세부과제가 추진되었고,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실험한옥 1건, 시범한옥 1건이 건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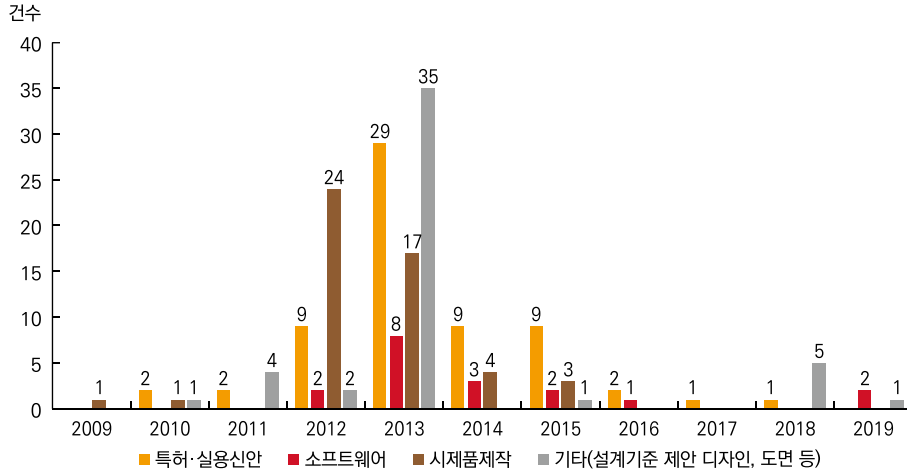
2013년 12월 시작된 2단계 R&D에서는 새로운 한옥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실증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핵심 기술 고도화 및 기준 개발, 신한옥 마을 모델 개발 및 구축,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모델 개발 및 구축 등의 세부과제가 추진되었고, 실험한옥 1건, 시범 한옥마을 1건(19동), 시범 한옥 4건이 조성되었다.

이어 2017년 4월 시작된 3단계 R&D에서는 한옥이 지닌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공간·장경간의 한옥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실증 구축, 성능 고도화 기술 개발, 한옥의 성능기준 마련 등의 연구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한옥기술개발 연구사업(R&D)을 통해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것은 총 181건(2019년 12월 기준)에 달하며 이는 민간사업자의 기술개발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옥 기술 R&D 관련 성과물 추이

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aia.re.kr> (검색일 : 2019.11.21.)를 참고하여 작성.



한옥기술개발 연구사업(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8건(29개동)의 한옥 건립을 통해 그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에 건립된 4동의 실험한옥(명지정사)은 개발 기술의 실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온도·기류·습도·CO 및 CO₂ 수치·소음·야외풍속 및 풍향·포름알데히드 수치·열환경 등에 대한 조사와 한옥의 부재별 변위 및 변형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임시 거주자를 모집하여 거주 후 평가를 진행하였다.

개발 기술 검증에 위한 Mock-Up 테스트 현황

구분

개요



명지대학교 실험한옥(명지정사)

- 위치 :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공사기간 : 2012년 2월 1일 ~ 6월 21일(약 5개월)
- 개발규모(부지면적 1,345㎡)
 - 지신재 : 시공 및 성능 테스트동 (126.18㎡, 지상 2층)
 - 온고재 : 전통한옥 성능 테스트동(69.12㎡, 지상 1층)
 - 일휴당 : 부위별 성능 테스트동(17.28㎡, 지상 1층)
 - 일신당 : 유닛모델동(35.90㎡, 지상 1층)
- 공사비(3.3㎡당 금액) : 7,500천원



은평 시범한옥(화경당)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25-29 일원
- 공사기간 : 2013년 3월 ~ 2013년 7월(4개월)
- 개발 규모 : 지상 2층
 - 대지면적 361.68㎡
 - 건축면적 71.10㎡, 연면적 142.2㎡
 - 건폐율 19.65%, 용적률 39.31%
- 공사비(3.3㎡당 금액) : 6,850천원



에너지절약형 실험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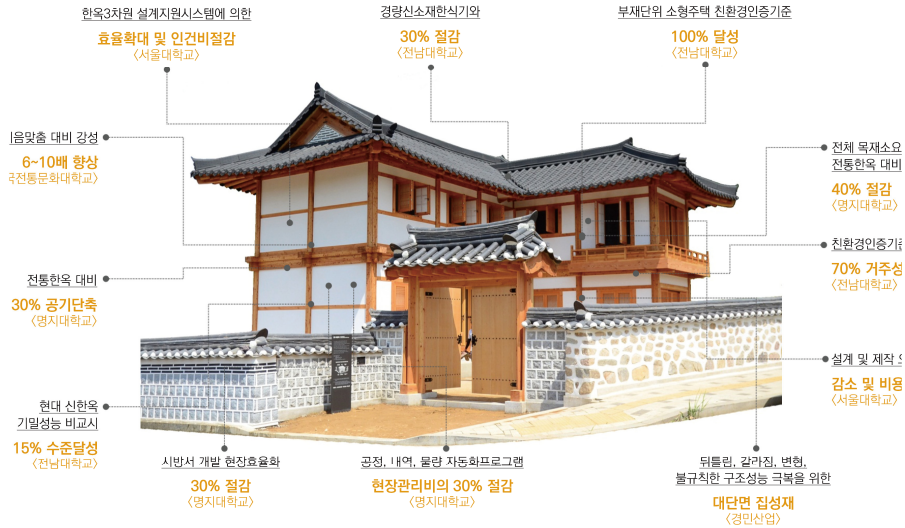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885 일원 신한옥 시범마을
- 공사기간 : 2016년 5월 20일 ~ 2016년 9월 30일
- 개발규모 : 지상 1층
 - 대지면적 12,300㎡
 - 건축면적 81㎡, 연면적 81㎡
- 공사비(3.3㎡당 금액) : 10,264천원

출처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세부연구성과 자료집」,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신한옥 시범마을 실증구축보고서」,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한옥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pp.1-358을 참고하여 작성.

두 번째 시범한옥인 화경당은 1단계 R&D에서 추진된 목업 테스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층 더 절감된 시공 단가와 보완된 구조·성능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2014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한옥보다 공사비는 약 40%(평당 688만 원 정도) 저렴하고 단열 성능은 향상된 현대의 한옥을 실증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은평 시범한옥(화경당) 적용 기술

출처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자연과 어울리는 한옥」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p.3.



세 번째 목업 테스트는 2016년 한옥마을 및 신한옥형 공공건축 모델 개발·구축 과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강릉 신한옥 시범마을 내에 에너지 절약형 실험한옥을 건립함으로써 추진되었다.³⁾ 이 실험한옥은 이른바 한옥형 패시브하우스의 구현을 위해 건립된 것으로, R&D를 통해 개발된 재료,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접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실험 결과 일반 한옥보다 열성능이 향상되고 일반 주택보다 에너지 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입증되었다.⁴⁾

3) 국토교통부(2016), “‘강릉 신한옥 시범마을’ 2일 상량식”, 6월 1일자 보도자료.

4)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신한옥 시범마을 실증건축보고서」, 한옥기술개발연구단, pp.115- 121.

한옥기술개발 R&D 성과를 실증하기 위해 수원, 강원 강릉, 전북 순창 등지에 총 5건의 실증 한옥 건립이 완료되었고, 3단계 R&D에서 경기 용인, 서울, 충남 홍성 등지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3건의 실증 한옥이 건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옥기술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옥건축 시장으로 기술이 확산되지 않은 실정으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범용화를 위해 향후 한옥 R&D 기술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홍보하기 위한 기술 지원플랫폼을 마련하여 R&D 기술의 상용화·범용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원 한옥기술 전시관

출처: 한옥기술개발연구단(2016)



순창 금과공립어린이집

출처: 한옥기술개발연구단(2016)



강릉 신한옥 시범마을(강릉 오죽한옥마을)

출처: 한옥기술개발연구단(2016)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R&D 추진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R&D 추진’은 한옥의 대중화와 경제성 제고를 통한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한옥을 둘러싼 각종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신한옥플랜이 발표된 2010년 당시 한옥의 대중화를 위해 가장 주요한 현안은 비용의 절감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산림청에서는 한옥 건축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 인프라 구축, 목재 건조기술 및 규격화 등에 대한 R&D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산림청에서 제안한 목재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및 R&D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한옥 부재 공급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림 생산목재의 일정물량을 한옥 부재로 공급 • 지역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의 한옥부재 공급기능 강화 • 목재 저장센터 확대
목재가공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용 기둥과 보를 대체할 집성재 가공시설 지원 • 부재의 정밀가공을 위한 프리컷 설비 등 지원
표준화 및 소재개발 R&D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용 목재 건조기술, 규격화·표준화, 신소재 등 개발 • 목조건축 표준모델(흔그린)을 신한옥 개발에 접목 • '15년까지 138억원 R&D 투입

출처 : 관계부처합동(2010),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 제3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자료, p.14.

신한옥플랜 및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에 따른 목재유통센터 건립이 현실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한옥 목재 공급 기능 강화라는 취지는 기존의 목재유통센터(중부/동부목재유통센터)를 통해 일부 실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목재저장센터는 조성은 문화재 복원 및 한옥 부재 등 특수 용재를 일정 장소에 저장하고, 버려질 위기에 처한 소량의 목재 등을 수집 및 저장하였다가 적시에 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목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써 추진되었다. 그 결과 신한옥플랜이 수립된 2010년 5월 이전 조성된 홍천(북부청)을 포함하여 2011년 이후 양평(북부청), 평창(동부청), 봉화(남부청), 음성(중부청), 남원(서부청) 등 총 5개소의 목재저장센터가 추가적으로 조성되었다. 다만, 한옥 건축 자재로써의 목재 유통·관리체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활성화 되었는가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만한 지표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2년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정을 통해 목재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종합계획’에는 ‘목재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지속가능한 목재 공급체계 구축’, ‘목재문화 기반 확대’, ‘목재이

용 분야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의 전략 및 그에 따른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⁵⁾. 이 계획은 「목재이용법」 제정 이전 수립된 산림기본계획 및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등을 비롯하여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사업을 말이 좀 이상한데, 뭐라고 고쳐야할지 고민되요.

2019년 5월 1일 산림청이 발표한 ‘목조건축 활성화 계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 소비에 있어 파급력이 큰 ‘목조건축’을 정책 대상으로 하여 목재 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목재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정책 대상을 ‘목조건축’으로 구체화 하고 있는 만큼 각각의 세부과제들 역시 이전의 법정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과제들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획되어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한옥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추진과제는 없는데 이는 한옥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한편, 신한옥플랜에서 제시하였던 한옥 목재의 부재 표준화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으며 한옥의 산업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한옥 설계 시공 전문인력 양성

한옥 설계·시공 전문인력 양성은 2011년 국토교통부(前국토해양부)의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작으로 실천되어 현재까지 총 867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2011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9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2012년에는 전년도에 시행한 한옥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한옥 시공 중간관리자 과정’이 신설되면서 한옥 설계 및 시공 2개 교

5) 산림청(2014),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종합계획(2015~2019)」, pp.3-7.

육과정으로 구성된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한옥 시공 현장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시공 중간관리자 과정을 통해 28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으며, 설계과정의 경우 전년도 두 배에 이르는 180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한옥 설계과정 및 시공과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2개 교육과정 체제의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2013년에는 161명의 설계과정 수료생과 28명의 시공과정 수료생이 배출되었으며, 2014년에는 179명의 설계과정 수료생과 49명의 시공과정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에 따라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공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공백기를 맞이하였다.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직업훈련 성격의 부처별 사업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되면서 당초의 취지를 반영한 인력양성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2019년 국토교통부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4년 만에 사업을 재추진하고 우수기관 인증제도 시행 등 「한옥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품질 관리 및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옥 시공 전문자격제도 도입은 몇 차례 검토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답보 상태로 한옥 전문인력 양성의 성과 창출 및 전문인력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중 있는 정책 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한옥 시공 전문업역 신설에 관해 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설계과정 연간 수료생 배출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사업예산	3억(각 1.5억)	5.2억(각 1.3억)	5.2억(각 1.3억)	5.2억(각 1.3억)	3.6억(각 1.2억)
교육기관	2개소 명지대, 전북대	4개소 명지대, 전북대, 경상대, 대한건축 사협회	4개소 명지대, 전북대, 경상대, 대한건축 사협회	4개소 명지대, 전북대, 계명대, 대한건축 사협회	3개소 전북대, 전남대, 대한건축사협회
모집인원	기관별 30~40인 92명	기관별 45명 내외 180명	기관별 45명 내외 161명	기관별 45명 내외 179명	기관별 45명 내외 116명
수료인원	총 728명				

출처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시공과정 연간 수료생 배출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사업예산	0.5억	0.5억	1억(각 0.5억)	0.65억
교육기관	1개소 건설기술교육원	1개소 건설기술교육원	2개소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한옥문화원	1개소 한옥문화원
모집인원	25명 내외 28명	25명 내외 28명	기관별 25명 내외 49명	30명 내외 34명
수료인원	총 139명			

출처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국가한옥센터 설립

국가한옥센터 설립은 한옥 정책 및 산업화를 지원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신한옥플랜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1년 5월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에 국가한옥센터가 설립되었다. 국가한옥센터는 ‘한옥 보급 및 산업화’, ‘한옥 보전 및 문화 육성’, ‘한옥과 관련한 정보 구축 및 산업동향’, ‘한옥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연구·조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시행된 2015년에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한옥센터’로 지정되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한옥센터의 업무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0조)**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 연구·조사
한옥과 관련한 전문산업의 육성
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한옥에 대한 국내외 홍보
한옥 및 한옥마을 등과 관련한 기준의 연구
한옥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연구
한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실천 방안 3 : 한옥의 보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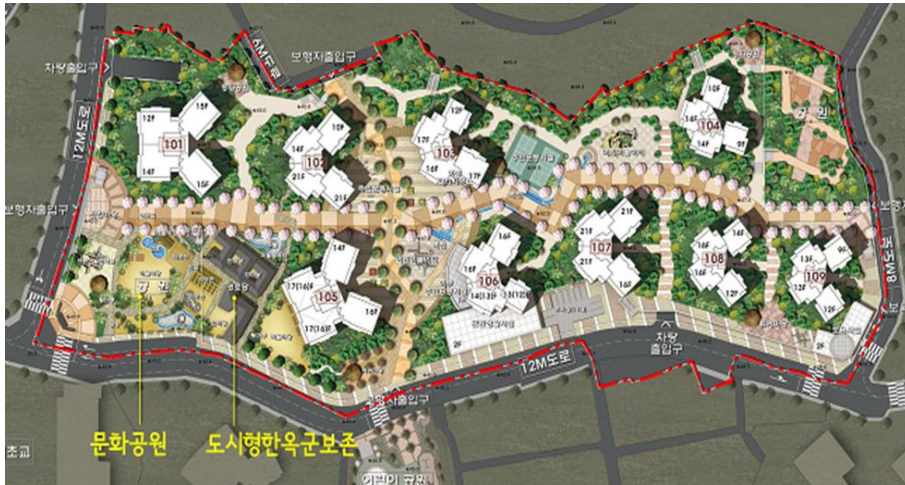
한옥의 보전·관리 실천을 위해 한옥의 멸실 방지와 한옥의 보전 지원을 세 부과제로 추진하였다.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한옥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

1999년 북촌 지역주민들의 보전대책 수립 요청으로 서울시가 2001년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옥등록제를 실시하면서 한옥 보전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노후화된 기존 시가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활발해진 도시정비사업으로 한옥은 다시 대규모 멸실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 6월 서울시는 전면철거형 도시정비사업으로 사라지던 도시형 한옥군과 골목길을 보존하기 위한 ‘한옥보존형 재건축 정비모델’을 제안하였고, 그 첫 번째로 한옥밀집지역인 정릉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4구역 재건축 계획안

출처 : 관계부처합동(2010),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 제3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자료, p.18.



정릉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은 구역 내 4개의 도시형 한옥을 보존하여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도시형 한옥군 보존지역에는 안마당, 골목길, 화단, 담장, 장독대 등 도시형 한옥요소와 어귀길, 안길, 마을마당, 어귀식재, 텃마루, 빨래터, 우물 등 전통 마을 요소를 결합하고, 보존지역 남측은 보존되는 도시형 한옥과 연계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정릉4구역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사업 열풍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2014년 구역지정이 해제되어 결국 무산되었으나 도시정비사업으로부터 한옥을 보전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08년 12월 ‘서울한옥선언’에 따라 2002년 북촌에 이어 2009년 돈화문, 인사동, 경복궁서측, 운현궁 일대를 한옥밀집지역으로 추

가 지정하였는데, 이 중 경복궁 서측의 경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혼재해 있어 한옥을 고려한 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10년 4월 최초 고시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한옥보전을 위하여 한옥지정구역 및 권장구역을 설정하고, 한옥 신축 및 개·보수 시 준수해야 하는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옛 도시조직의 보전을 위해 구역별 특성에 따른 건축물 지정 및 허용용도 계획, 건축물 높이기 준 제시, 건축 한계선 계획 등의 지침을 부여하였다. 또한 새로운 주거모델로서 가로변 한옥상가, 2층 한옥주택 등 한옥형 공동주택과 도시스케일을 고려한 3~5층의 중저층형 공동주택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으로 2000년 초부터 서촌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재개발사업(옥인, 체부, 누하, 필운)으로 인한 한옥의 대규모 멸실 우려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지역특성을 살린 한옥보전형 지구단위계획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문화재나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 등을 보존·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2010.9.16. 제정)에 담아 도시정비사업으로부터 한옥을 비롯한 역사 환경 보전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한옥의 특성과 개보수 편의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

한옥건축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현행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옥의 처마와 관련하여 2009년 6월 외벽으로부터 길게 돌출되는 한옥의 처마와 차양 부연 등의 돌출구조를 건축면적 산정에서 일부 제외하는 방안이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반영되었다. 2010년 2월에는 처마의 돌출을 고려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제80조의2 별표2)과 전통사찰, 전

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제46조(건축선의 지정)을 완화(제6조)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2011년 7월에는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한옥의 경우 전통사찰, 등록문화재와 함께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완화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이 개정되었다.

한편 유지관리를 위해 개보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옥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도 있었다.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옥 개축 및 대수선 시 지붕틀의 범위에 서까래는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제2조 및 제3조의2). 또한 기존 건축물 특례에 한옥의 개축을 포함하여 건축물 및 대지가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제6조의2).

이외에도 「주차장법 시행령」의 한옥밀집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제6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주민지원사업에 주거용 한옥의 신축 및 개축을 포함(제27조)하는 등이 내용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건축규제 완화는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면서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로 이어져 한옥의 개보수가 보다 용이해지게 되었다.

한옥 관련법 개정 연혁

법률명	개정 내용	개정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한옥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	'09.6.31.
	(제2조 및 제3조의2) 개축 및 대수선의 범위에서 서까래 배제	'10.2.18.
	(제6조) 전통사찰 및 전통한옥에 대한 도로사선제한 완화	
	(제6조의2) 기존 건축물 특례에 한옥의 개축과 대수선 포함	
	(제80조의2)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완화	
	(제81조) 맞벽건축 허용	'12.12.12.
	(제6조의2) 기존 건축물 특례에 한옥 대수선 내용 삭제	'14.10.14.
	(제111조)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포함	'16.7.19.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한옥밀집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07.12.20.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비시가화지역의 한옥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	'11.7.1
	(제84조) 비시가화지역에서 신축 한옥에 대해서도 건폐율 완화	'14.1.14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주민지원사업에 주거용 한옥의 신축 포함	'12.11.12.

「개발제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출처 : 이강민(2014), 「한옥 건축의 자원과 특례」, 『건축과 도시공간』, v.1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5 재정의 및 일부 보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2010년을 전후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단위의 한옥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법적 기반을 갖지 못하여 정책시행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한옥의 보전·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간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한옥 지원 조례의 법적 근거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경위

2008년 7월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마련 (국토해양부)

2010년 8월 「한옥의 보존 및 진흥 지원 특별법안」 마련 (김영환 의원)

2011년 2월 「한옥건축 진흥법안」 마련 (김기현 의원)

2011년 10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의원발의 (신영수 의원 등), 한옥규정 포함

2013년 4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원발의 (김기현 의원 등)

「한옥등건축자산법」은 「문화재보호법」과의 충돌방지를 위해 건축자산의 정의에 문화재는 제외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자의 신청을 전제로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를 운영한다. 이를 전제로 각종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자율적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기준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특정 건축자산의 점적 관리뿐만 아니라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경관 보전을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면적관리를 유도한다. 셋째, 신규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 활성화, 관련 산업 육성 등 한옥 진흥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 법에서는 특히 한옥과 관련해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기존 「건축법」에 따른 규제 완화에 덧붙여 관계 법령의 특례를 마련하여 기존 한옥의 개보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가한옥센터 설치,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산업 지원·육성,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등에 관한 근거도 포함되었다.

이 법률 시행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던 한옥 지원 조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재정비되

었다. 법률 시행과 같은 해인 2015년 전국에 지어지는 다양한 한옥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 재료,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옥건축기준」이 고시되었고, 2019년에는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한옥의 구조안전 확인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가한옥센터(arui)에서는 2015년 ‘한옥건축기준 안내서’,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 제정 안내서’, 2019년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안내서’를 발간 및 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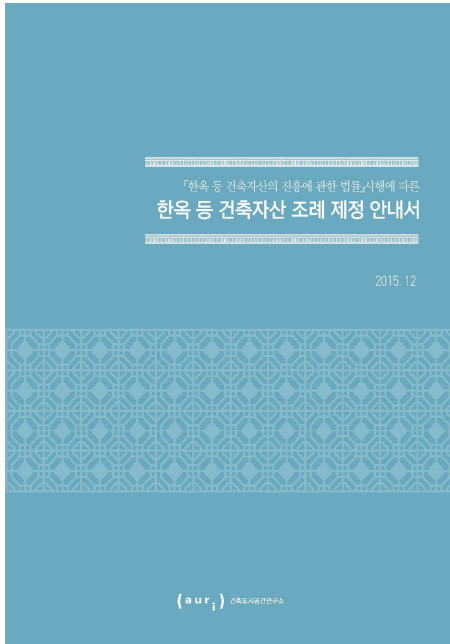
2019년 국가한옥센터의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지도·성과·중요성·지속성 모든 부분에서 한옥 보전·관리 법제도 기반 마련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10년간 추진되어온 한옥 정책의 성과로 판단된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명시된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법률명	개정 내용	제·개정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14.6.3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17.8.9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기준	‘14.6.3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14.6.3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14.6.3 ‘17.8.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14.6.3
민법	제242조제1항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17.8.9

한옥건축기준 안내서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2015.12)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 제정 안내서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2015.12)



지자체 한옥 개보수 지원사업

노후한옥 개보수 등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은 서울시, 전주시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 왔다.

서울시는 2001년 복촌을 대상으로 한옥건축비용지원을 시작한 이래 그 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서울한옥자산선언’은 서울시가 그동안 한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멸실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1, 2기

한옥정책⁶⁾을 시민이 거주하고 관리하기 쉬운 한옥으로 대중화시키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발표한 것으로, 7가지 주요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한옥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옥뿐만 아니라 근현대 건축자산, 한옥골목까지 서울시 전체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명품한옥과 한옥명장 인증제 도입과 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창의적인 한옥건축 유도, 네 번째는 한옥포털(on-line)과 한옥지원센터(off-line) 운영, 다섯 번째는 목재유통센터·한옥공장·한옥교육원을 설립할 예정인 횡성군과 연계, 여섯 번째는 공공한옥건축 확대이며, 마지막으로 재단, 조례, 조직 등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⁷⁾

이러한 서울한옥자산선언을 토대로 서울시는 2019년 3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붕, 단열, 창호, 담장공사 등 부분수선 보조금을 기존 1천만 원(한옥보전구역 내 1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용자금 1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옥비용 지원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를 통해 접수받으며, 지원금액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신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도면과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붕수선의 경우, 별도의 계획도면 없이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6) 1기 한옥정책(2000년, 복춘가꾸기)은 복춘을 대상지로 전체적인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한옥 멸실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2기 한옥정책(2008년, 한옥선언)은 대상지를 경복궁 서측, 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 일대로 확대하여 비용을 2배 상향 지원함으로써 한옥가치를 발굴하고자 하였다(출처: 서울특별시(2019), “서울시, 한옥 짓고 고치고...공사비 최대 1억8천만 원 지원 ‘상시접수’”, 8월 30일자 보도자료, p.1 재정리.).

7) 서울특별시(2015), “서울시, 응급센터 119 ‘한옥지원센터’ 7월 오픈”, 6월 25일자 보도자료, pp.6-7 재정리.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비용을 지원하는 전면수선과 부분수선 외에도 기존 한옥의 크고 작은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 심의절차 없이 소규모 수선을 지원하는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을 2017년 3월부터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는 한옥밀집지역의 화재방지를 위해 노후 불량 전기배선을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원정책을 다각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2001년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한옥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9년 8월까지 지원한 한옥 수와 금액은 총 1,059건에 360여 억 원에 이른다. 2019년에만 7월 말 기준으로 75건에 31억 원의 보조금과 융자금(보조금 22억4천2백만 원, 융자금 8억5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서울시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구분	서울시 전체	한옥보전구역* 내	비고
전면수선	보조 6천만 원	9천만 원	공사비 2/3 이내
	융자 6천만 원 (내부 4천만 원, 외부 2천만 원)	9천만 원 (내부 6천만 원, 외부 3천만 원)	
신축	보조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공사비 2/3 이내
	융자 2천만 원	3천만 원	
부분수선	보조 2천만 원		
	융자 1천만 원		

주 : 한옥보전구역은 한옥이 밀집한 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지정한 구역으로, 북촌, 경복궁 서측, 돈화문로, 인사동, 익선동, 성북구 선잠단지 총 6개소

출처 : 서울특별시(2019), “서울시, 한옥 짓고 고치고…공사비 최대 1억8천만 원 지원 ‘상시접수’”, 8월 30일자 보도자료,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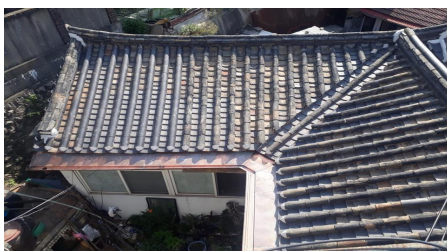
종로구 원서동의 전면수선 전(上)과 후(下)의 모습

출처 : 서울특별시(2019), “서울시, 한옥 짓고 고치고...공사비 최대 1억8천만 원 지원 ‘상시접수’”, 8월 30일자 보도자료



종로구 사직동의 부분수선 전(上)과 후(下)의 모습

출처 : 서울특별시(2019), “서울시, 한옥 짓고 고치고...공사비 최대 1억8천만 원 지원 ‘상시접수’”, 8월 30일자 보도자료



경기도 수원시도 2009년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한옥촉진지역’을 중심으로 한옥건축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한옥촉진지역은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건축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하여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한옥촉진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옥건축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한옥건축 등 보조금 지원사업의 비용지원 내용

구분	연면적	지원금액		
		신축 및 개축 (공사비 50% 내)	수선(리모델링 포함, 공사비 50% 내)	외곽내부 수선 (공사비 범위 내)
한옥 촉진 지역 내	70㎡ 미만	8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
	70~90㎡미만	9천5백만 원	7천만 원	
	90~110㎡ 미만	1억2천만 원	9천만 원	
	110㎡ 이상	1억5천만 원	1억1천만 원	
한옥촉진지역 외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8천만 원	6천만 원	1천만 원



주 : 상기금액은 최고 지원금액이며 한옥위원회 심의 시 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출처 : 수원시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sw-www/deptHome/dep_tour/culture01/culture01_06.jsp

지역밀착형 한옥 지원 조직의 운영: 서울/경북 한옥지원센터

서울시는 보다 가까운 현장 지원을 위해 2017년 5월 북촌 내 한옥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한옥지원센터는 시민의 점검 요청 시 출동해 현장점검 및 상담을 진행하고, 노후개선이 시급한 경우 직접공사를 지원하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의 곁에서 한옥 교육 및 홍보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내 모든 한옥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한옥 119’는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년 1회, 최대 350만원(당초 200만원에서 상향)의 응급 수선 및 노후개선 공사를 직접 지원하는 선도적인 정책서비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공공한옥에 자리를 잡은 한옥지원센터는 한옥 유지·관리 지원 및 건축 상담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도 도민들을 위한 한옥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북한옥지원센터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와 한옥119 출동절차

출처: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



실천 방안 4 : 한옥의 적극적 활용

한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한옥의 관광자원화와 공공시설 한옥 도입을 세부과제로 추진하였다.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

한옥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관광인프라 조성의 일환으로, 고택·종택 등 전통한옥을 활용하여 전통숙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농촌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것

이 목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부터 추진한 ‘전통한옥 체험 숙박 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한옥 체험숙박공간으로 활용 중인 한옥을 대상으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옥 상태, 접근성, 숙박 수용 규모, 시설 여건, 주변 관광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한옥을 선정한 후, 1개 한옥당 내부시설 개·보수와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한옥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내용, 질적 수준,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한옥체험숙박시설을 대상으로 1개 한옥당 프로그램 운영비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한옥 개·보수에는 매년 10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에는 2006년 2억 원에서 점차 예산을 늘려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투여한 사업비는 약 116억 원에 달한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성북구 성북동·동선동·삼선동·돈암동 일대 기존한옥을 개·보수하여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하였고, 경상북도 13곳의 체험시설을 대상으로 내부시설 개·보수와 편의시설 설치에 12억 원(국비 5억 7,500만 원+지방비)을 지원하였다⁸⁾. 또한 경상북도 9곳에 고택음악회, 전통제례체험, 전통음식체험, 전통다도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에 2억 원(기금+시군비)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2006년부터는 한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용확대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원하며,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8) 경주 월암재, 안동 진성이씨 망천파 고택, 영주 순흥안씨 종택, 경산 난포 고택, 의성 이병건 가옥, 성주 사우당 종택 등(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2013), 「한옥 정책·제도·사업」, p.69.)

한스테이 홈페이지 화면

출처 : <https://www.hanstay.co.kr>



한옥체험업의 지원 및 육성

2009년 10월 7일 한옥숙박체험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관광 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이 신설되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차목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을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의 지정 기준으로 ‘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2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나, 「관광진흥

법」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다. 이에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종인 관광편의시설에서 등록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면적·건축·안전·위생 등의 등록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 안전을 도모하고 불량한옥 양산을 방지하는 등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한옥체험업 지원 및 육성의 성과로 2009년 한옥체험업 제도 도입 당시 17건이던 한옥체험업 시설은 2018년 기준으로 1,284건이라는 70배 이상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한편, 한옥체험업 시설의 건축적 기준이 모호하여, 무분별한 양산을 지양하고 한옥 체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국가 관광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한옥스테이’를 비롯하여 굿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통합,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옥체험업의 사업체수, 이용자수 및 연간 총 매출액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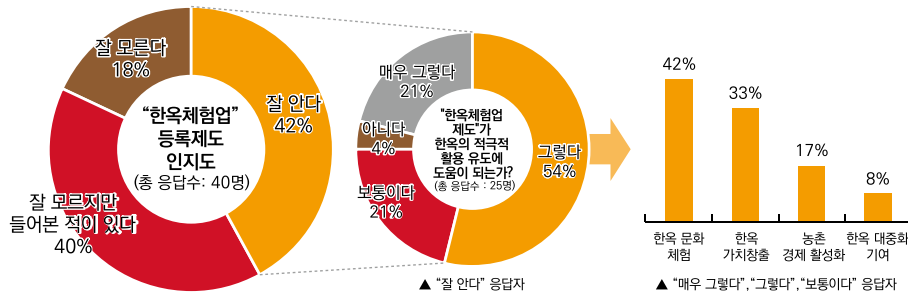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개)	17	320	437	602	767	927	1,108	1,188	1,266	1,284
이용자 (명)	60,570	271,668	437,329	598,298	557,165	633,988	889,776	1,081,955	1,015,295	1,711,600
연간매출액 (백만원)	478	7,907	16,320	25,755	16,657	20,346	20,864	31,734	36,425	60,22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2018),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재정리.

2019년 국가한옥센터 전문가 인식 조사결과, 한옥체험업 관련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82%가 한옥체험업 제도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체험업 제도가 한옥의 적극적 활용 유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54%)’ 및 ‘매우 그렇다(21%)’, ‘보통이다(21%)’라고 응답한 인원이 전체 응답자의 96%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주된 이유는 한옥체험업이 한옥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매체이고 그로써 한옥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옥체험업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2019),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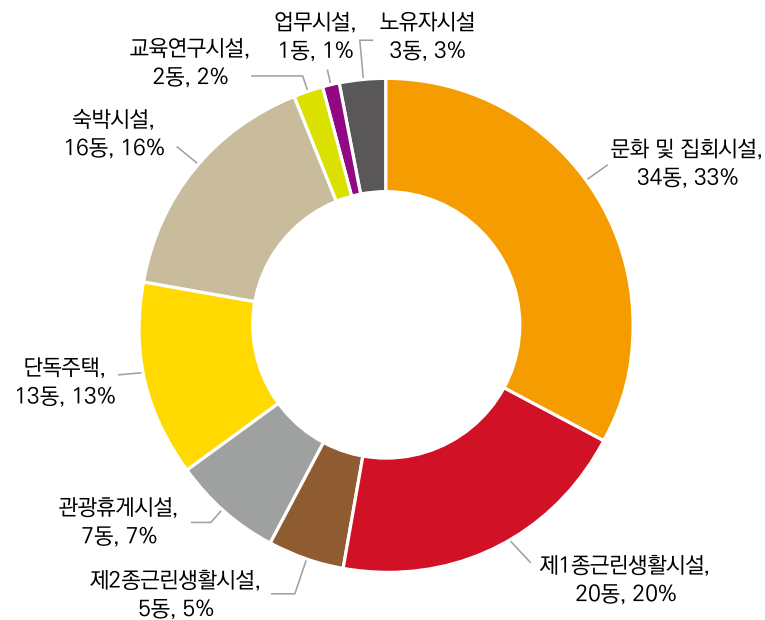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추진과 중단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36건의 사업에 총 54.8억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총 101동의 한옥 공공건축물이 조성되었다.

구성된 한옥 공공건축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전체의 33%(34동)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20%(20동), 숙박시설이 16%(16동)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건축면적을 조사한 결과 31㎡~60㎡의 소규모 한옥 공공건축물이 19%(26동)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옥건축 사업 대상의 용도별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2018),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추진 현황", 내부자료 및 건축물대장 참고하여 작성x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옥지원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사업명	사업비	지원액	추진
2008	전남 영암군	한국 음식문화센터 건립	700	150	○
	충남 공주시	구들장 체험 숙박촌 조성	100	100	○
2009	경기 이천시	도자예술촌 한옥 체험공간 조성	477	100	○
	충남 부여군	한옥생활체험관 건립	1,669	100	○
	전남 장흥군	원목생활가구단지 조성	1,600	100	○
	전남 영암군	한옥표본집 제작	1,895	100	○
	서울시	한옥문화관 조성	689	100	○
2010	서울 구로구	한옥 어린이 도서관 조성	1,785	300	○
	전북 전주시	전통한옥 체험·홍보교육장 건립	500	200	○
2011	서울 은평구	은평박물관 건립(한식정자설치)	200	200	○
	광주 남구	전통한옥 기능성 체험관 건립	170	170	○
	강원 강릉시	전통차 체험관 건립	130	130	○
2012	서울 종로구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건립	200	200	○
	경기 김포시	운양동 주민센터 신축	150	150	○
	경남 산청군	산청 약선음식 체험관 건립	200	200	○
	전남 담양군	창평면사무소 한옥청사 건립	200	200	○
	경기 이천시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한옥건립	150	150	○
2013	경기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	200	200	○
	충남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200	200	○
	전북 고창군	고창 한옥체험마을 조성	200	200	○
	서울 성북구	(당초)주민커뮤니티공간조성 (변경)홍천사내어린이집('13.12.17)	170	170	○
	서울 성북구	한옥보존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30	30	○
2014	서울 노원구	상계9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2,568	200	○
	서울 종로구	청운문학도서관 건립(한식정자 설치)	357	120	○
	경기 수원시	장안동 관광안내소 및 문화시설 조성	500	200	○
	충북 괴산군	전통한옥 체험관 조성	620	150	○
	전남 강진군	달빛 한옥마을회관 조성	225	150	○
	경북 경주시	전통한옥 전원마을 조성 기본계획 용역	100	30	○

연도	구분	사업명	사업비	지원액	추진
2015	서울 종로구	상촌재(세종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3,515	130	○
	서울 노원구	국공립 한옥어린이집 건립	411	100	○
	충남 금산군	한옥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조성	200	100	○
	전남 영암군	한옥체험관 조성사업	400	200	○
	전남 강진군	다산 한옥관 조성사업	700	200	○
2016	강원 태백시	한옥경로당 건립(문곡경로당)	400	150	○
	경남 함안군	무릉마을 한옥예절교육관 건립	320	150	○
2017	전북 익산시	한옥 보건지소 건립	2,150	150	△
합계		36건	8,096		

○ : 추진 완료 △ : 추진 중

출처 : 국토교통부(2018),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추진 현황",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호응을 이끌어냈으나 2017년을 끝으로 지속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되었다. 신한옥플랜 수립 이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된 전국의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건수는 150건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토부 한옥 건축 지원사업이 지자체 차원에서 한옥 조성을 선도했다는 긍정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며, 일상생활 속 한옥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2019년 국가한옥센터의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인지도·성과·중요성·지속성 모든 부분에서 높게 평가된 것은 사업 재개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HAN House 조성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한국 및 현지 국민들에게 한옥 및 전통공예 등 전통문화를 표상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 HAN House 조성은 여러 동으로 구성된 시설의 일부 동을 한옥으로 건축하거나 내부공간의 일부를 한옥풍으로 조성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후쿠오카총영사관

은 철근콘크리트조와 전통기와지붕을 접목하여 지어졌고, 주중한국대사관
저는 총 4동의 건물 중 1동이 한옥으로 건축되어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
용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재외공관 문화 전시장화 사업(2003~)’의 일환으로 재외공
관을 한국 전통의 재료(한지, 공예품 등)를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한스타일 연출 사업’을 전라북도와의 업무협약(2009년 체결) 하에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19개 국가에 한스타일 공간
을 조성하였다. 외교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주요 인사들이 방문하는 전
세계 180개 재외공관일부를 한국적 재료(한지, 공예품 등)를 활용하여 현
대적으로 연출하고 한실(韓室)로 리모델링하여 한국문화 홍보효과를 도모
하고자 하였다.

주중 대한민국대사관저 내 한옥 전경(건원건축)



재외공관 한스타일 연출 사업 추진 현황

추진연도	대상국가
2015	오만, 광저우
2016	시애틀, 몽골, 프랑스, 모로코, 상가포르
2017	가나, 콜롬비아, 제네바, 폴란드, 중국, 시드니, 사우디아라비아, 샌프란시스코
2018	말레이시아, 태국
2019	영국, 독일

출처 : 외교부(2019), 2019 매력한국, p.43.

재외공관 한스타일 연출 사업 추진 모습

(좌: 모로코대사관소응접실, 중상: 프랑스대사관민원실, 중하: 콜롬비아대사관소강당, 우상: 가나대사관로비, 우하: 영국대사관온실)

출처 : 외교부(2019), 2019 매력한국, p.43.



한옥 진흥 정책의 법정 계획인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2015년 6월 4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한옥 진흥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인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되었다.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은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을 비전으로 2대 정책목표, 6대 실천과제, 16개 세부 실천과제, 37개 세부사업이 수립되었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한옥건축 확대와 관련한 성과 목표를 계획하였는데, 한옥 공공건축물 및 한옥마을 조성으로 1차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0년 연간 1,600동 건축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된 한옥 진흥 정책의 성과에 대해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서 한옥과 관련된 정책목표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의 세부 실천과제 ‘한옥 조성 확대’와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의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목표, 실천과제, 세부사업 및 사업내용

목표	실천과제	세부사업	사업내용
건축자산의 가치발견	건축자산 총 조사 지원	건축자산 기초통계 및 관리기반 구축	건축자산 조사 실시 지원 기초통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건축자산 관리강화
		건축자산 기록화	기록화 프로그램 철거위기 건축자산 기록화 사업
			건축자산 용어 정리
	건축자산 기초연구	건축자산 가치 발굴 연구	건축자산 유형 및 가치 특성 연구
			건축자산 인문학 기반 모색

목표	실천과제	세부사업	사업내용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 자산	국민공감 확산	지원 및 활용 다각화 정책 연구	건축자산 산업동향 조사		
			우수건축자산 등록 지원		
			우수건축자산 활용 활성화 방안		
		우수건축자산 활용 다양한 콘텐츠 개발	우수건축자산 MAP 발간		
			우수건축자산 사례 발굴		
			주민 주도형 건축자산 교육		
		참여형 교육 실시	건축자산 담당 공무원 교육		
			업계 종사자 전문가 교육		
			국립 도시건축박물관과 연계	국립 도시건축박물관 전시계획 수립지원	
	한옥 조성 확대	한옥 조성	개발제한구역 활용 한옥마을 조성		
			문화재 주변구역 한옥마을 조성		
			한옥마을 선도 사업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활성화	다양한 용도의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한옥 활성화 기반구축		
			한옥 건축비용 및 자산가치 평가 합리화		
		한옥 건축비 기준 개발	한옥 감정평가 개선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건축자산 보전·활용 기술개발	우수건축자산 관련 기술기준 마련
				전통 기술의 계승 및 현대화	구들 등 전통기술 현대화
	대공간·다층형 한옥 기술개발				
	한옥 성능 기준 마련				
	산업화 기반 조성	지역별 클러스터 조성 추진			
지역 맞춤형 한옥 전문인력양성					
건축자산 활용 선도		공공 우수건축자산 지원	공공소유 우수건축자산 등록		
	공공건축자산 증개축 지원사업 추진				
	공적활용 사업모델 구축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시범사업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과 연계한 건축자산 진흥	도시재생사업 연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고도연계				

출처 : 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5).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국토교통부, 12~31.

실천과제4 : 한옥 조성 확대

신도시 내 한옥마을 조성 추진

한옥 조성 확대를 위해 특화형 한옥마을 조성,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활성화, 한옥 건축비용 및 자산가치 평가 합리화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한옥마을 특성 반영을 위한 신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신도시에 한옥마을을 조성을 추진하였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총 50동을 건립하였으며,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2016년 69필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여 5채의 한옥이 건립되었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특화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는 500여 년 동안 형성된 민속마을 내 한옥 건축 유도 등 경관관리를 위해 ‘이사동 민속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등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한옥기술개발 R&D 사업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강릉 신한옥 시범마을 조성하여 체험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세종시 한옥마을 전경

출처 : <https://blog.naver.com/sejong5898/221689266060>



강릉 신한옥 시범마을(오죽한옥마을) 전경

출처 : <https://blog.naver.com/denopos/221490987289>



신도시 내 한옥마을 조성 및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사업 추진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공공 건축물 건립 시 한옥으로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까지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한옥기술개발 R&D 사업에서 신 한옥형 공공건축물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한옥 공공건축물의 건립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청운문학도서관 전경



한옥기술개발 R&D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건립 모습(좌: 순창 금과공립어린이집, 우: 은평한옥마을회관)

출처 : 한옥기술개발연구단. (2016). 한옥기술개발 연구성과자료집.



실천과제5 :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전통기술의 현대화를 위한 한옥기술개발 연구 추진

현대건축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재료와 성능 기준은 한옥보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옥의 전통기술의 계승과 함께 현대 건축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건축유형에서 활용하고,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한옥 공공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추진되었다.

먼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에서는 전통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옥시공핸드북을 제작하여 한옥 시공 교육기관에 교육자료로 배포하였으며, 한옥기술개발 R&D에서는 한옥의 대공간 조성을 가능하기 위한 10m급 대공간 한옥설계 및 시공기술개발이 '21년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한옥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해 한옥기술개발 R&D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해 건립된 실증구축 사례를 대상으로 거주공간의 정주성 및 쾌적성평가를 통해 한옥의 통합 거주성능 평가체계 수립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옥의 거주성능 기준 및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한옥의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공급업체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수요자와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어, 한옥자재유통센터 등 지역별 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한옥의 품질 담보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이 중 한옥자재유통센터 건립 등 지역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제는 산림청 등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과업으로 추진이 되지 못했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11년~2014년까지 추진되었던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9년부터 재개되어 한옥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요(2019-2020)

구분		한옥설계전문 과정	한옥시공 관리자 과정
지원 금액	2019	3억6000만원	6,500만원
	2020	3억4800만원	7,500만원
교육기관		3개 기관	1개 기관
교육인원		교육기관별 40명 내외	30명 내외
교육대상		건축사, 건축사시험 자격자, 건축분야 기술사 등	한옥교육(3개월 이상) 이수자, 건축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등
교육기간		160시간 이상(5개월)	144시간 이상(5개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년도 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276, 2020년도
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97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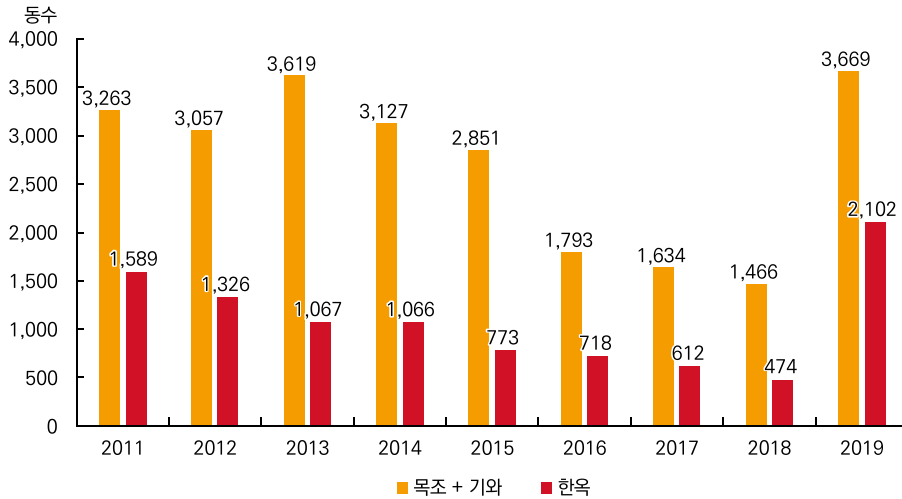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한옥 진흥 정책 성과

9년 동안 인허가를 받은 한옥 수는 총 9,727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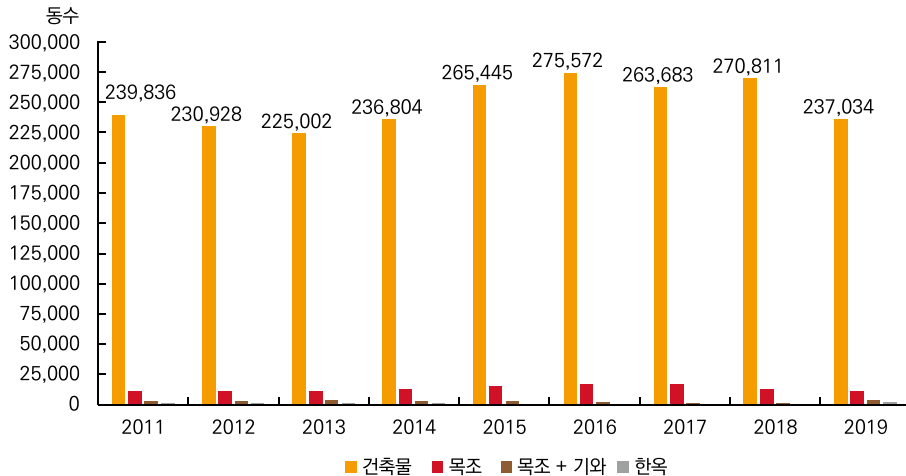
2010년 新한옥플랜이 발표된 이후인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한옥 인허가 수를 살펴보면, 2011년 1,589동, 2012년 1,326동, 2013년 1,067동, 2014년 1,066동, 2015년 773동, 2016년 718동, 2017년 612동, 2018년 474동, 2019년 2,102동으로 9년 동안 총 9,727동의 한옥이 건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옥 건축 수는 매년 약 1,080동의 한옥이 증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2011년~2019년 건축물 인허가 수를 살펴보면, 9년간 총 2,245,115동의 건축물이 지어졌으며 매년 약 249,457동의 건축물이 건립되었다. 이 중 목조건축물은 총 122,249동으로 약 5.4%를 차지하고, 목조+기와지붕으로 건립된 건축물은 목조건축물의 약 2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목조+기와지붕 건축물 중 한옥은 약 3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9년간 지어진 전체 건축물의 약 0.4%에 해당된다. 지난 9년간의 한옥 진흥 정책 성과로 보기에 부족한 수치일 수 있다. 하지만 매년 건축되는 건축물 1,000동 중 4동이 고유한 건축형태인 한옥으로 건축된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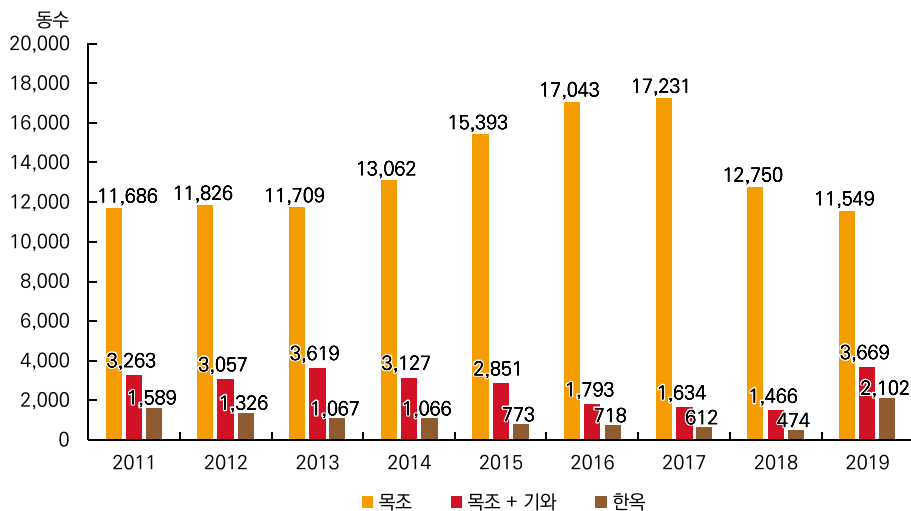
2011-2019 한옥 인허가 수는 총 9,727동, 매년 약 1,080동



2011-2019 인허가 받은 건축물 수는 총 2,245,115동, 매년 약 249,457동



2011-2019 인허가 받은 목조건축물 수는 총 122,249동, 매년 약 13,583동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옥 인허가를 받은 지역은 전라남도 총 2,258동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별 한옥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8개의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총 733동, 9개의 광역도에서 총 8,944동이 건립되었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한옥을 건축한 지역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23.7%(174동)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이고, 그 뒤를 이어 대구광역시(96동, 13.1%)와 울산광역시(94동, 12.8%), 부산광역시(92동, 12.6%)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도 중 가장 많은 한옥을 건립한 지역은 전라남도로 25.1%(2,258동)를 차지하고, 이어서 경상북도(1,827동, 20.4%), 경상남도(1,377동, 15.4%), 전라북도(917동, 10.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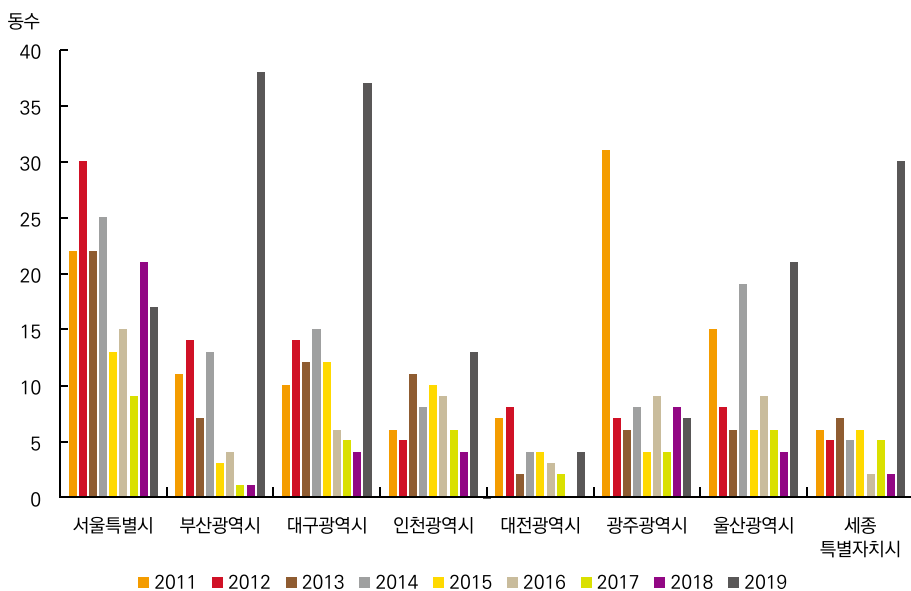
2011-2019 지역별·연도별 한옥 인허가 수

(단위: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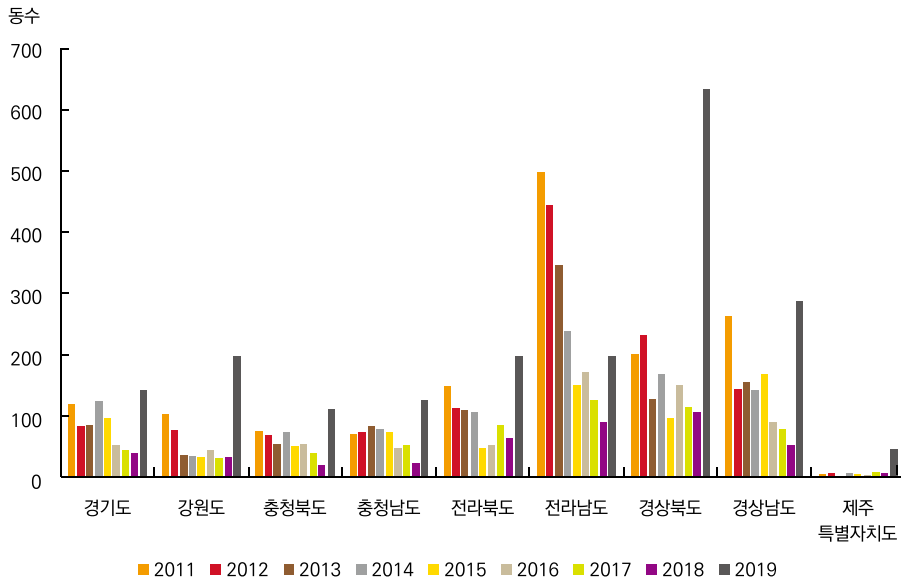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서울특별시	22	30	22	25	13	15	9	21	17	174
부산광역시	11	14	7	13	3	4	1	1	38	92
인천광역시	10	14	12	15	12	6	5	4	13	91
대구광역시	6	5	11	8	10	9	6	4	37	96
광주광역시	7	8	2	4	4	3	2		7	37
대전광역시	31	7	6	8	4	9	4	8	4	81
울산광역시	15	8	6	19	6	9	6	4	21	94
세종특별자치시	6	5	7	5	6	2	5	2	30	68
경기도	119	82	84	124	96	51	44	38	142	780
강원도	102	77	36	34	32	44	31	33	197	586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충청북도	75	68	54	72	50	53	38	20	110	540
충청남도	69	72	83	78	72	48	52	23	126	623
전라북도	148	112	109	106	47	52	84	63	196	917
전라남도	498	443	345	239	149	171	126	90	197	2,258
경상북도	201	232	128	169	96	149	113	105	634	1,827
경상남도	264	143	155	141	168	89	78	52	287	1,377
제주특별자치도	5	6	0	6	5	4	8	6	46	86
합계	1,589	1,326	1,067	1,066	773	718	612	474	2,102	9,727

2011-2019 특별시 및 광역시 한옥 건축 수는 총 73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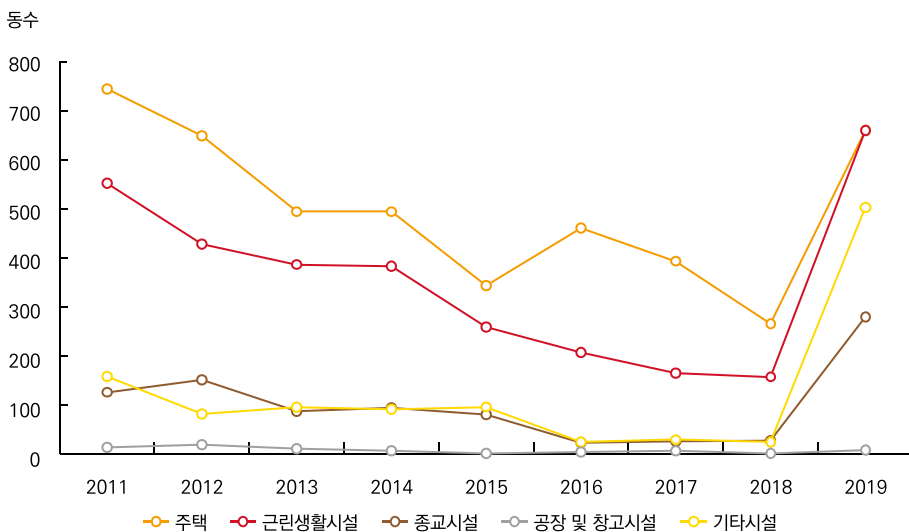
2011-2019 광역도 한옥 건축 수는 총 8,94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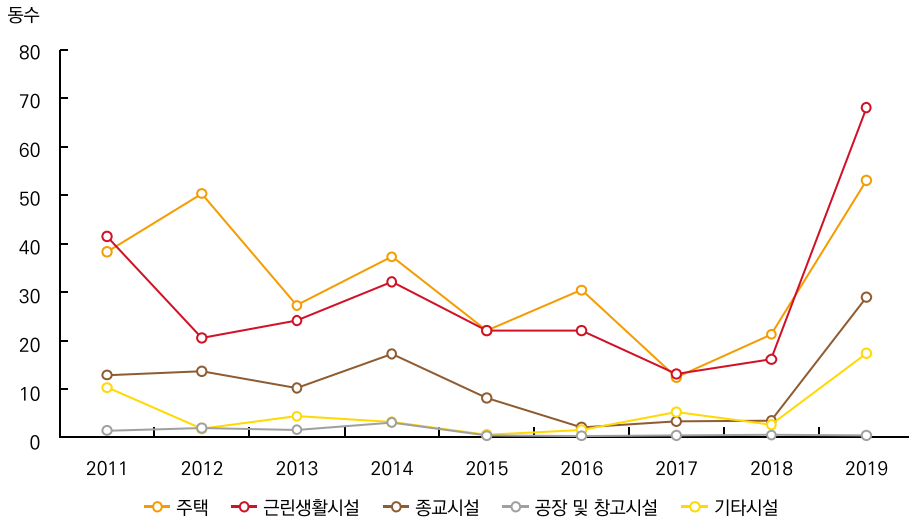
9년 동안 인허가를 받은 한옥의 가장 많은 용도는 주택 총 4,493동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어진 한옥의 49.2%(4,493동)가 주택으로 지어졌으며, 그 뒤를 이어 근린생활시설이 32.7%(3,481동), 종교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등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용도특성을 살펴보면, 매년 주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동일한 비율로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으로 보여진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주택이 41.7%(290동)로 가장 많이 건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근린생활시설이 37.1%(258동), 종교시설이 14%(97동)로 나타났다. 광역도에서도 주택이 46.5%(4,203동)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근린생활시설이 32.4%(2,923동), 기타시설이 11.5%(1,043동)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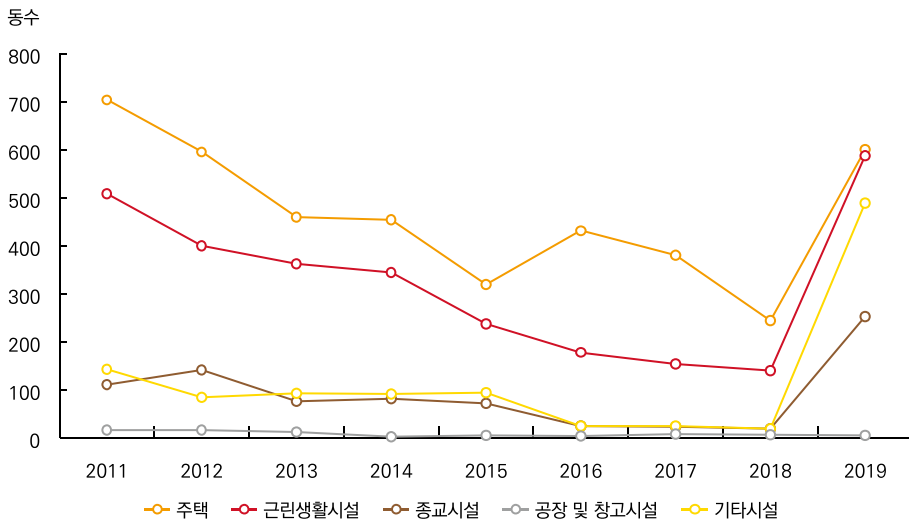
2011-2019 지어진 한옥의 81.9%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2011-2019 특별시 및 광역시 한옥의 78.8%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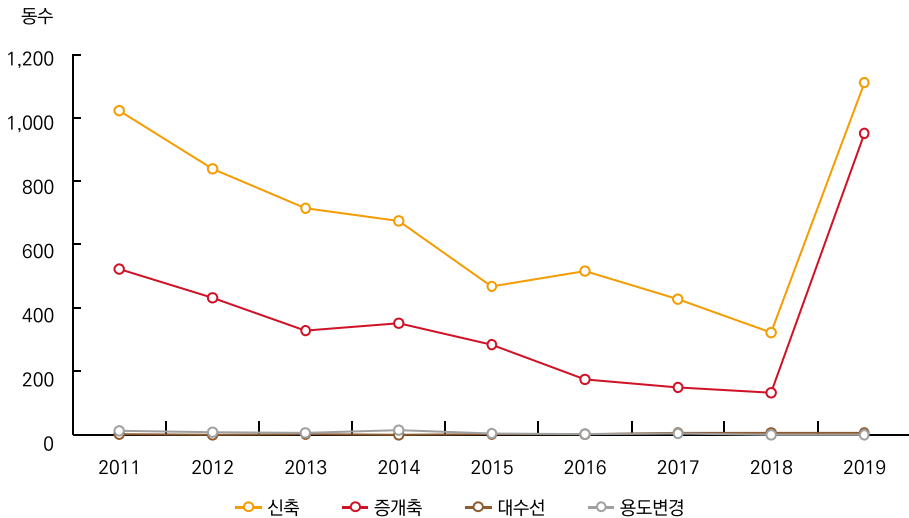
2011-2019 광역도 한옥의 78.9%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9년 동안 인허가 받은 한옥의 63.2%는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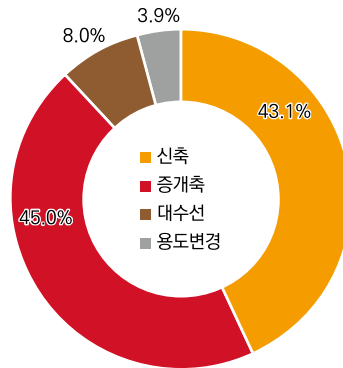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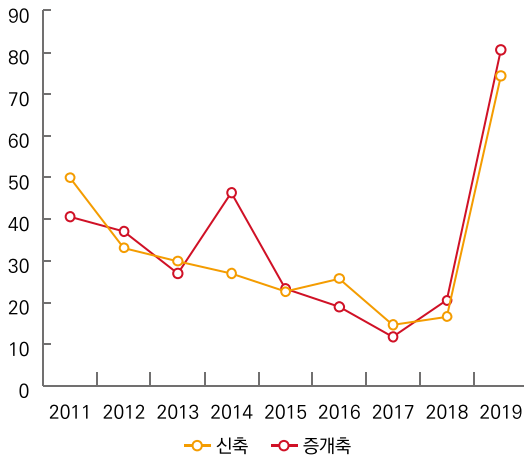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 받은 한옥 중 63.2%(6,129동)는 신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증개축 비율이 45.0%(309동), 신축은 43.1%(296동)로 신축보다 증개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광역도에서는 신축 비율이 64.7%(5,833동), 증개축 비율은 34.0%(3,066동)으로 신축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신축 비율이 증개축 비율보다 우세하다가 2018년부터 증개축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광역도는 2011년부터 신축이 증개축보다 일정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11-2019 지어진 한옥의 63.2% 신축, 34.8% 증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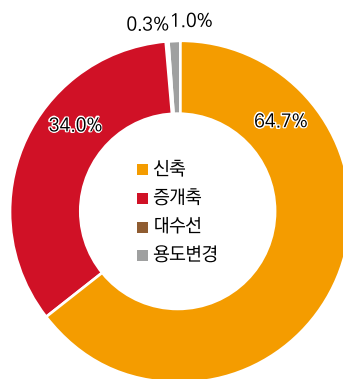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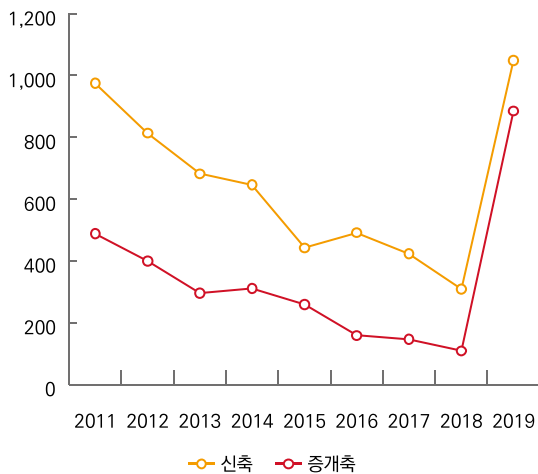
2011-2019 특별시 및 광역시 한옥의 43.1% 신축, 45.0% 증개축

동수



2011-2019 광역도 한옥의 64.7% 신축, 34.0% 증개축

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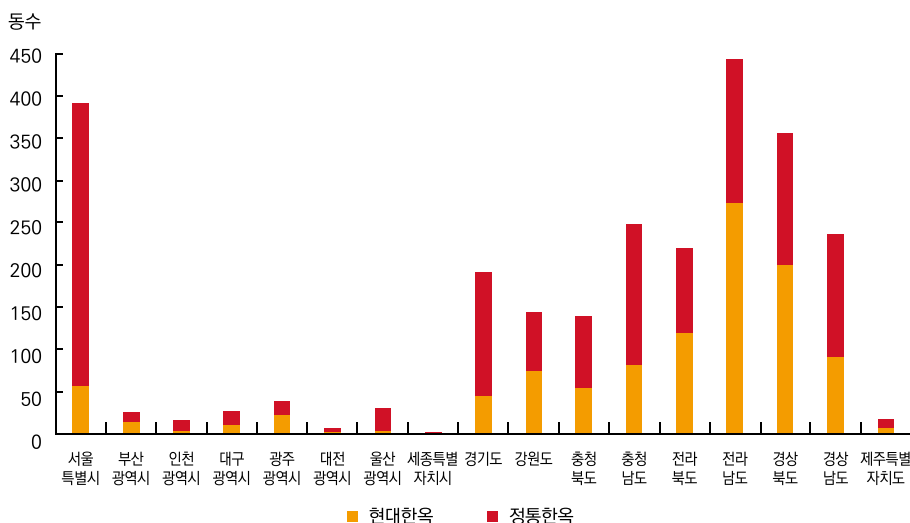


2019년 기준 한옥 공공건축물 수는 총 2,536동

2019년 기준 한옥 공공건축물은 총 2,536동으로, 정통한옥 1,469동, 현대한옥 1,046동이 있으며, 지역별로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17.5%, 443동), 서울특별시(15.4%, 391동), 경상북도(14.0%, 335동)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옥 공공건축물 유형별 지역분포를 보면 현대한옥은 전라남도(273동), 경상북도(200동), 전라북도(120동)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정통한옥은 서울특별시(344동), 전라남도(170동), 충청남도(166동), 경상북도(155동)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옥 공공건축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35.1%(890동), 근린생활시설이 31.4%(796동), 주택이 16.9%(428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옥 공공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 총 44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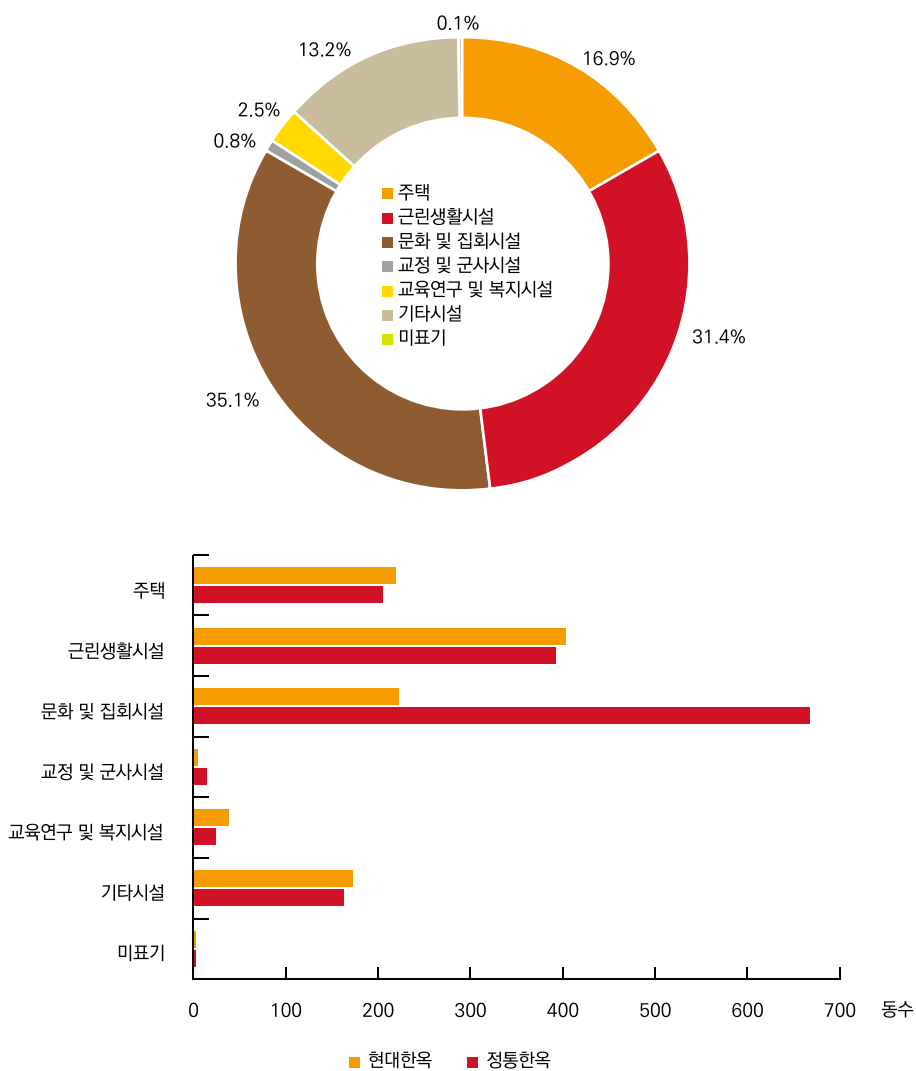


한옥 공공건축물 지역별 현황

(단위 : 동)

구분	현대한옥	정통한옥	합계
서울특별시	57	334	391
부산광역시	15	11	26
인천광역시	5	12	17
대구광역시	11	17	28
광주광역시	23	16	39
대전광역시	3	4	7
울산광역시	4	27	31
세종특별자치시	-	2	2
경기도	45	146	191
강원도	75	70	145
충청북도	55	85	140
충청남도	82	166	248
전라북도	120	99	219
전라남도	273	170	443
경상북도	200	155	355
경상남도	91	145	236
제주특별자치도	8	10	18
합계	1,067	1,469	2,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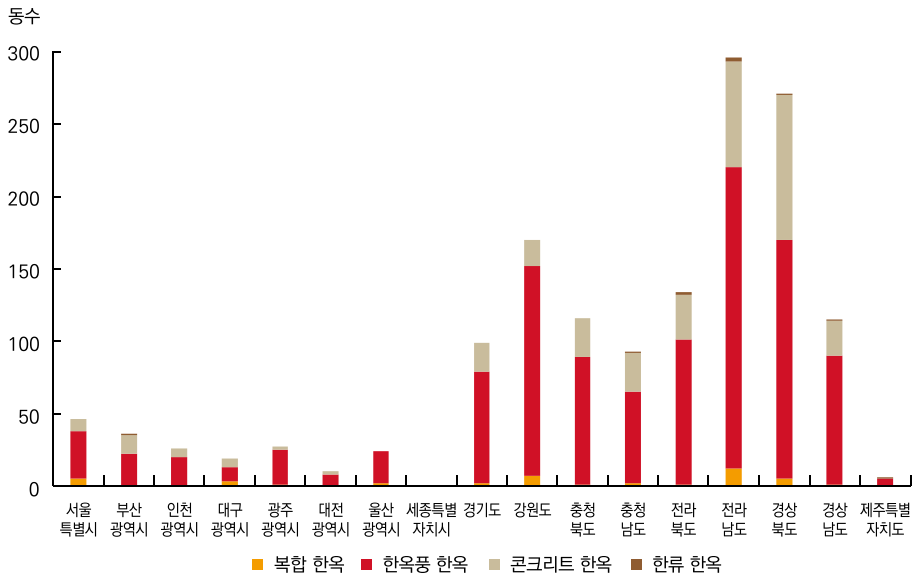
한옥 공공건축물의 66.5%가 문화 및 집회시설과 근린생활시설



2019년 기준 한옥형 공공건축물 수는 총 1,488동

2019년 기준 한옥형 공공건축물은 총 1,488동으로, 한옥풍 한옥 1,079동, 콘크리트 한옥 357동, 복합한옥 42동, 한류한옥 10동이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 19.9%(296동), 경상북도 18.2% (271)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한옥형 공공건축물 유형별 지역분포를 보면 복합한옥은 전라남도(12동), 한옥풍 한옥은 전라남도(208동), 경상북도(165동), 강원도(145동), 콘크리트 한옥은 경상북도(100동), 전라남도(73동)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한옥형 공공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 총 296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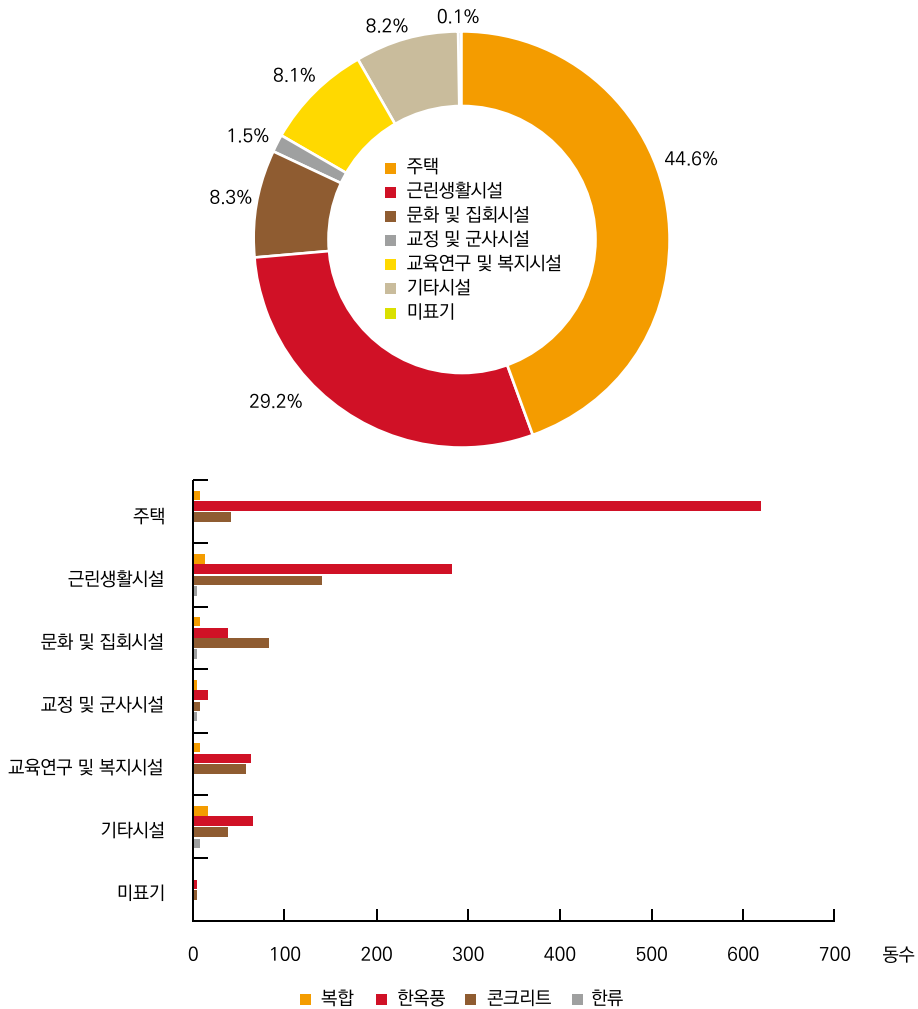
한옥 공공건축물 지역별 현황

(단위 : 동)

구분	복합 한옥	한옥풍 한옥	콘크리트 한옥	한류 한옥	합계
서울특별시	5	33	8	-	46
부산광역시	-	22	13	1	36
인천광역시	-	20	6	-	26
대구광역시	3	10	6	-	19
광주광역시	1	24	2	-	27
대전광역시	-	8	2	-	10
울산광역시	2	22	-	-	24
세종특별자치시	-	-	-	-	-
경기도	2	77	20	-	99
강원도	7	145	18	-	170
충청북도	1	88	27	-	116
충청남도	2	63	27	1	93
전라북도	1	100	31	2	134
전라남도	12	208	73	3	296
경상북도	5	165	100	1	271
경상남도	1	89	24	1	115
제주특별자치도	-	5	-	1	6
합계	42	1,079	357	10	1,488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주택이 44.6%(664동), 근린생활시설이 29.2%(434동), 문화 및 집회시설이 8.3%(123동)로 높게 나타났다.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73.8%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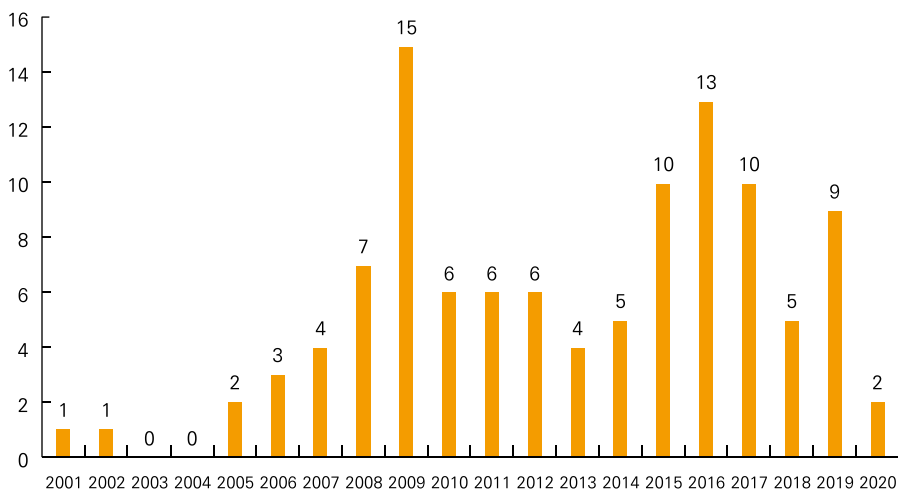
2020년 8월 기준 한옥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는 총 109개

2001년 경상북도 경주시 건축조례에 한옥 지원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8월 기준 109개의 지자체에서 한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가장 많은 조례가 제정되었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5년부터 꾸준히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한옥 관련 조례 제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해는 2009년

2020년 8월 기준(단위: 개)

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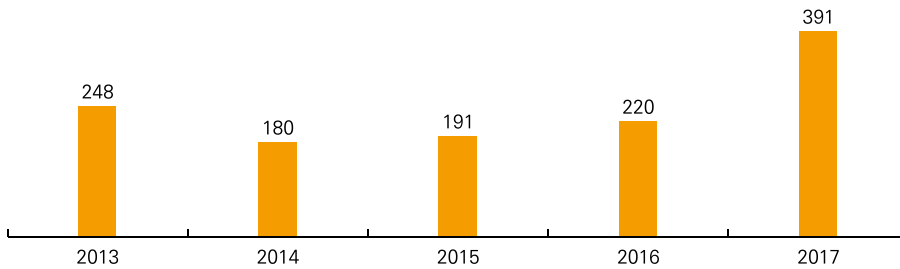


2013-2017년 5개년 지자체 한옥 지원은 총 1,230건, 382.6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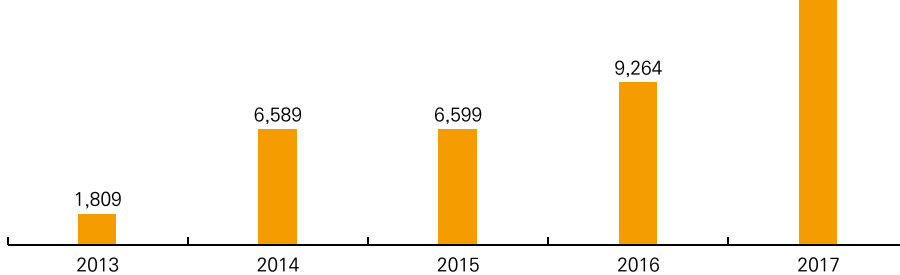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지자체 한옥 지원은 총 1,230건, 지원 금액은 총 382.6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391건, 13,997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있었으며, 2013년도에는 248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지원 건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원 금액은 1,809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비용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지원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한옥 지원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7년

[한옥 지원 건수, 단위: 건]



[한옥 지원 금액,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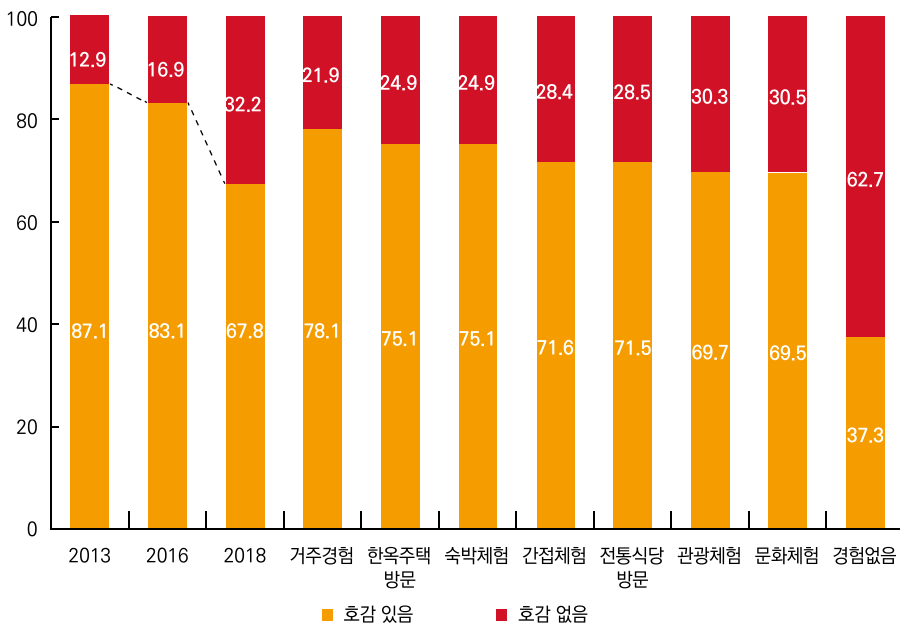


한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감소

2010년 한옥 정책이 시작된 이후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도 2013년 87.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에도 83.1%로 관심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 한옥에 대한 관심은 67.8%로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매년 점차 관심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감소

단위: %



한옥정책,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다.

1. 한옥정책의 현 주소
2. 한옥정책이 당면할 여건 변화

10

1.

한옥정책의 현 주소

수요자에게는 비싼 한옥, 공급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옥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던 2000년대 초반부터 한옥의 보전 및 보급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거론되었던 사항은 단연 ‘건축비용’이었다. 국가한옥센터에서 2013년, 2016년, 2018년에 시행한 ‘한옥의 인식 및 수요특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옥의 단점으로 언급된 것 중에 ‘주택비용이 비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옥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구매비용을 언급하였다. 한옥 진흥 정책이 추진되고 가격을 절감시키기 위해 한옥 시공 매뉴얼 개발, 한옥기술개발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옥 거주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고가의 건축비용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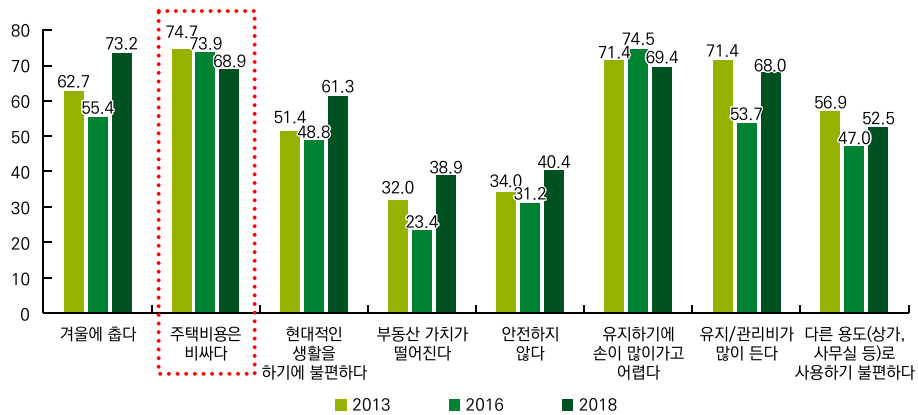
한국감정원 2019년 건물신축단가표 기준으로 한옥 건축비를 살펴보면, 일반한옥의 표준단가는 평균 1,276,400원/㎡, 전통한옥(소형)의 표준단가는 4,044,000원/㎡, 신한옥의 표준단가는 평균 2,756,500원/㎡으로, 한옥의 사용 재료 및 구법 등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옥의 건축비용이 높은 다양한 원인 중 근본적인 이유로 높은 시공비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한옥 수요자들의 대부분은 표준화된 한옥형태보다는 개별 생활패턴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선호함에 따라 규격화된 자재를 다양으로 사용하지 못하다보니 부재의 원재료가격이 증가되고 치목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되고 공정이 증가되면서 자연스레 공사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옥의 단점

(2013, 2016, 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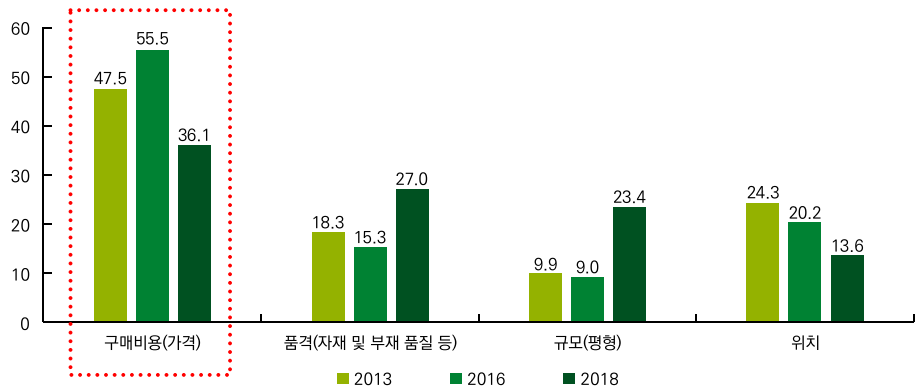
출처: auri 국가한옥센터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한옥 구매결정 시 고려요인

(2013, 2016, 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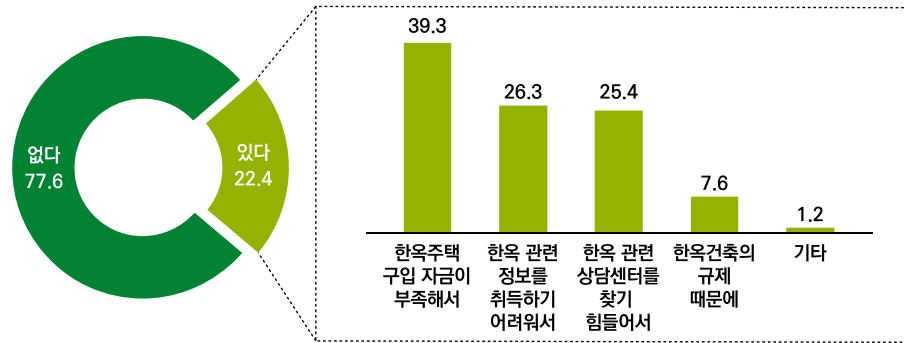
출처: auri 국가한옥센터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한옥 거주 노력 경험여부 및 매입을 하지 못한 이유

(2018, 단위: %)

출처: auri 국가한옥센터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가의 비용을 들여 한옥을 건축하게 되면, 한옥을 짓는 공급자는 수익창출이 원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자인 한옥을 짓는 목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옥을 건축하면서 집을 몇 채 처분했다는 시공자, 거주지를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목수 등 한옥건축 공사를 통해 이윤이 확보되지 않아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한옥 건축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경비로 구성되는데, 총 건축비용이 비쌌어도 불구하고 시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재료비 및 경비의 문제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규격화된 자재 사용이 건축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재료비 및 경비 절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량의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옥에 사용되는 부재의 표준화 및 산업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옥의 수요에 비해 낮은 한옥건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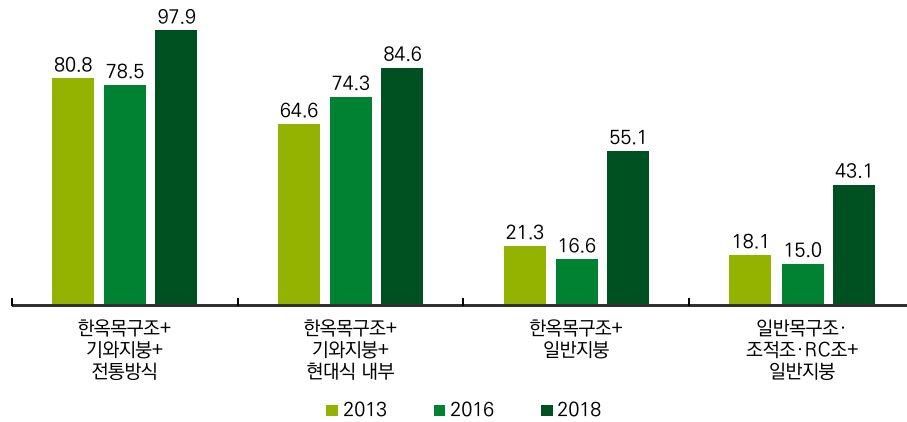
한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지만(2018년 기준 67.8%) 한옥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2013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0명 중 6명이 한옥의 거주를 희망했던 것에 반해 2018년 기준 10명 중 3명이 한옥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수요가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옥을 거주하고자 희망하는 수요자는 존재하고 있으며, 한옥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옥이 지어지는 수량 또한 매년 감소되고 있어, 2018년에는 총 474채의 한옥이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한옥 인허가 추이 분석 결과, 연간 약 953채의 한옥이 지어진 것으로 나와 한옥 수요에 비해 실제 지어지고 있는 한옥 수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감소되는 한옥의 수요와 한옥의 인허가 수는 한옥건축산업이 육성·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옥거주를 희망하는 다양한 수요자들의 니즈를 고려한 한옥의 재료 및 형태 등의 다양화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한옥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옥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한옥에 대한 인식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한옥형태에 대한 개발을 통해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옥의 인식 범위

(2013, 2016, 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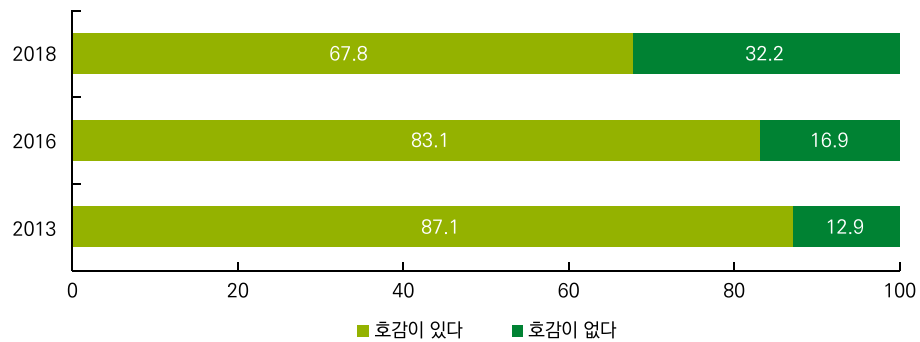
출처: auri 국가한옥센터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한옥에 대한 호감도

(2013, 2016, 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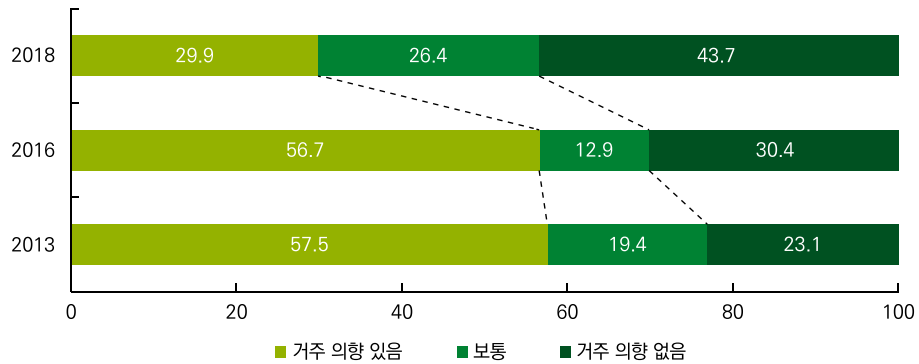
출처: auri 국가한옥센터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한옥 거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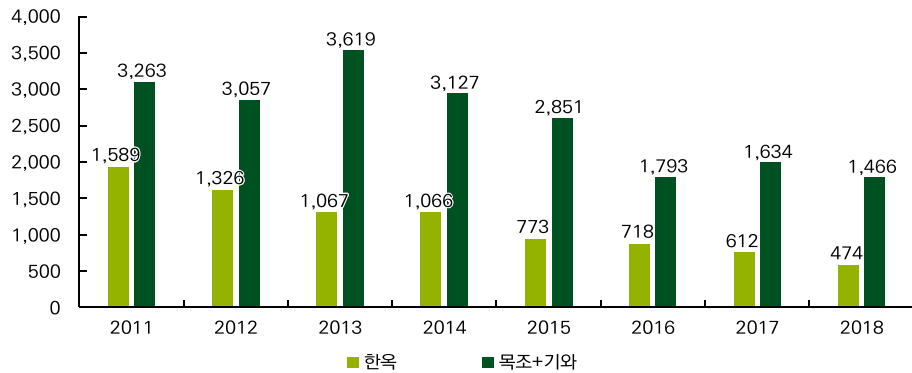
(2013, 2016, 2018, 단위 : %)

출처: auri 국가한옥센터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2011-2018 한옥 인허가 추이

(단위 :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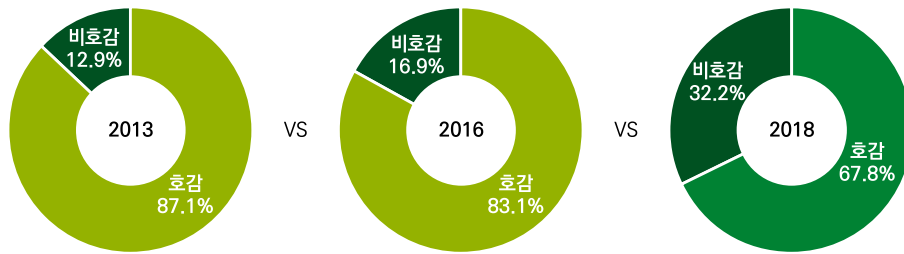


지속적인 한옥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2000년대 한류 열풍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고 소외되었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우리의 전통건축인 한옥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한옥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옥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도 증가했고 한옥을 경험하고자 하는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옥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옥의 거주 수요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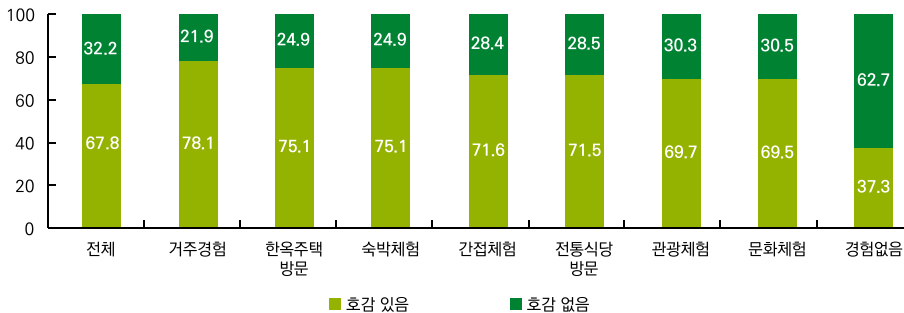
한옥에 대한 호감도 (2013, 2016, 2018)

(전체 응답자 1,000명, 단일응답, 단위 : %)



한옥 경험에 따른 호감도 차이 (2018)

(전체 응답자 1,000명, 단일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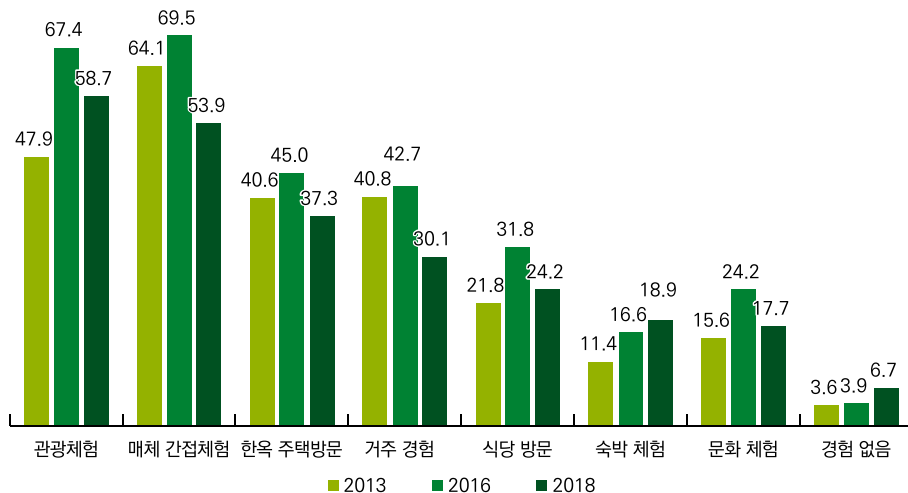


국가한옥센터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국민 한옥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한옥 거주방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옥에 대한 경험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8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살펴봐야할 부분은 한옥을 체험한 사람이 한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호감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향후 한옥을 보다 손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한옥의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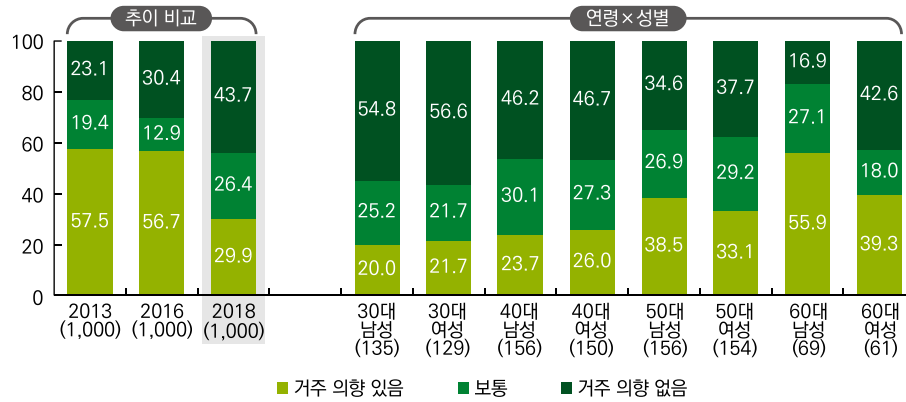
한옥에 대한 경험 (2013, 2016, 2018)

(전체 응답자 1,000명, 복수응답, 단위 : %)



향후 한옥 거주 의향

(전체 응답자 1,000명, 단일응답, 단위 : %)



한옥 신기술 확산

한옥기술개발로 인한 성능개선 성과에도 여전히 좁고 불편한 인식이
높은 한옥

2009년부터 한옥의 건축비용 절감 및 성능개선을 목표로 한옥기술개발 R&D가 추진되어 왔으며, 건축비용 절감과 환경성능, 기밀성능 등 거주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성과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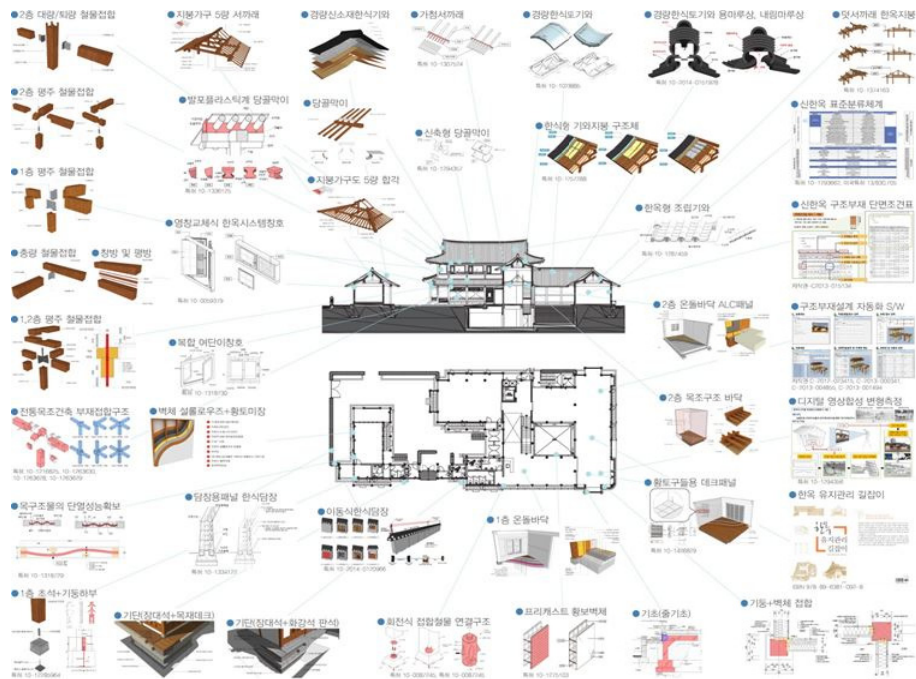
1단계(2009.12.~2013.09.)에서는 한옥의 거주 성능 확보와 건축비 절감을 주요 추진 목표로, 평당 1,200만원~1,500만원이 소요되는 건축비용을 700만 원대로 절감시키고, 현대적 거주 성능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기술개발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140개의 부위별 적용기술이 개발되었고, 공정, 내역, 물량 자동화프로그램 및 시방서 개발로 공기단축과 현장관리 효율화에 의한 건축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한옥 구조 부재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로 합리적 부재단면 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초와 초석 및 기둥, 층간 기둥과 기둥을 고정하는 철물 개발을 하였으며, 한옥의 주구조재인 원목의 뒤틀림, 갈라짐, 변형, 불규칙한 구조성능을 극복하기 위한 간벌재를 활용한 대단면 집성기술 개발과 전통이음맞춤 대비 강성이 6~10배 정도 향상된 이음맞춤법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한옥에서 목공사 다음으로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붕공사비용의 절감을 위해 건식공법의 경량한식토기와를 개발하여 기와 수량과 지붕중량을 낮춰, 공사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지붕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한식토기와 및 보형물을 개발하였다. 한식창호의 기밀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한옥에 어울리는 목재시스템 창호 개발과 시공 현장에서의 수작업 공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동식 한옥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개발된 기술 중에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접합 철물은 생산설비를 갖추 수 없어 제작단가에 의한 건축비 상승이 문제로 나타났으며, 원목의 구조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대단면 집성목은 원목에 비해 고가인 단점이 있고, 목재시스템 창호 또한 제작 단가가 전통창호에 비해 1.5배 높게 나타나 성능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얻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한옥기술개발R&D 1단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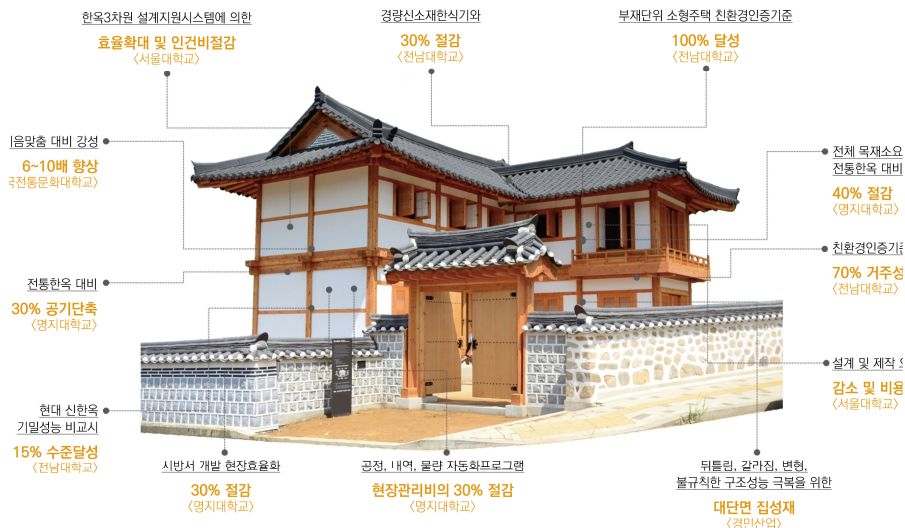
출처 : 김상협, (2019). 한옥기술개발 현황과 방향. 2019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산업으로 본 한옥” 자료집.



1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시 은평한옥마을 내 도심형 지상 2층, 건축면적 71.1㎡, 연면적 142.2㎡ 규모의 시범한옥을 구축하였다. 기술 개발 성과로 거주 성능 향상 및 전통 한옥공사비 대비 40%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한옥기술개발R&D 기술을 활용한 시범한옥 “화경당”

출처 : 한옥기술개발연구단. (2016). 한옥기술개발연구성과자료집. 14.



2단계(2013.12.~2016.10.)에서는 한옥의 보급·확산을 주요 추진 목표로, 1단계에서 개발된 기술 및 연구 성과물을 기반으로 신한옥 모델의 보급·확산을 위한 기술보급, 실증구축을 통한 기술적용 등을 추진하여, 한옥기술전시관 1개소와 한옥공공건축물 3개소, 그리고 신한옥 시범 한옥마을을 조성하였다. 각 건축물에는 개발된 140개의 기술 중 60% 내외가 적용되어, 성능 향상 및 가격 절감, 공기단축의 효과가 있었다.

3단계(2017.04.~2021.12.)에서는 신한옥 보급·확산과 대공간 한옥기술 개발 및 성능 고도화를 주요 추진 목표로, 살림집 규모의 한옥에서 확장하여 10m급 대공간의 한국형 목조건축을 개발하고,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증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에서 개발된 140개의 부위별 적용기술의 성능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옥의 경간은 주택의 경우 대부분 3m~6m으로, 현대건축의 경간이 3m~15m인 것에 비해 너무 협소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경간과 층수의 증가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수평적 확장을 고려하여 약 10m~16m 내외의 경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공간이 가능한 한옥이 개발될 경우, 상업용 건축물 전체면적 18,130,000㎡가 대체 가능하며 현재 한옥 시장규모의 15배가 확대가 가능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3단계에서는 기존의 한옥, 신한옥의 범주에서 확장하여 한국형 목조건축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경간이 6m~30m 미만인 대경간 한옥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목조건축은 한국건축의 정체성이 반영된 살림집 규모를 벗어난 목조건축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⁰⁾

9) 김상협. (2019). 한옥기술개발 현황과 방향. 2019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산업으로 본 한옥”자료집. 36.

10) 전계서. 37.

한옥기술개발R&D 3단계에서 개발 중에 있는 10m급 대공간 한옥설계 시공기술

출처 : 김상현, (2019). 한옥기술개발 현황과 방향. 2019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산업으로 본 한옥” 자료집.



1단계부터 현재 진행 중인 3단계에서 한옥의 성능 및 비용 절감은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개발된 한옥기술의 성과에 대한 홍보 및 확산이 되지 않아 실제 수요자들이 기술성과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여전히 국민들의 한옥 거주 성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높은 실정이다. 1단계 기술개발 성과가 발표된 시점인 2013년에도 국민들의 한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생활의 불편함과 겨울철에 추운 이유를 한옥의 거주여향이 없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2016년과 2018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에 비해 겨울철 추위에 대해서는 점차 인식이 개선되는 것에 반해 주거생활의 불편함은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기술개발의 성과 확산 및 지속성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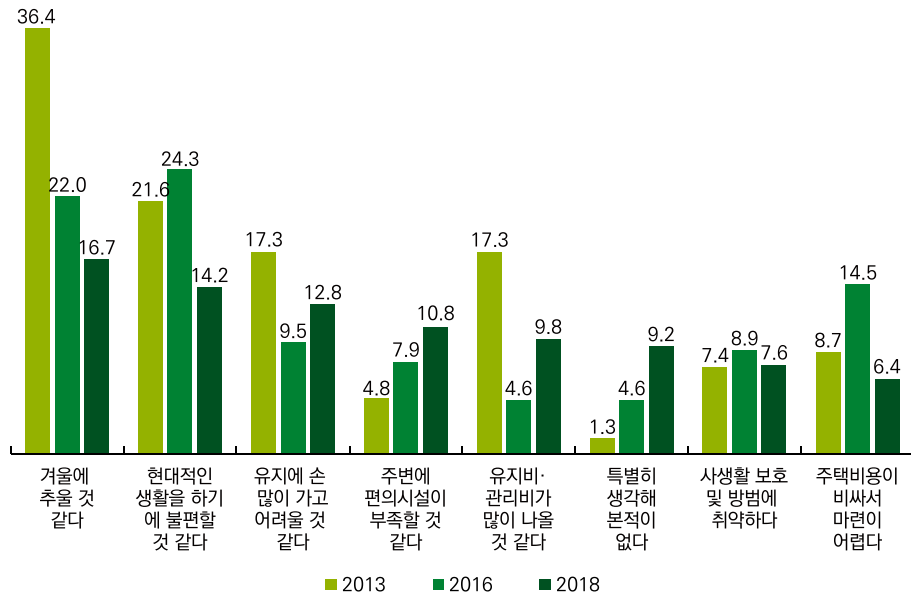
2019년 한옥 활성화 정책 성과 점검 및 방향 수립을 위해 10년 이상 추진되고 있는 한옥기술개발의 홍보·확산 정도 및 향후 추진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한옥 전문가들의 인식을 인지도, 성과, 중요성, 지속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결과, 한옥기술개발의 성과는 비교적 낮은데 반해 중요도 및 지속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한옥 기술개발에 대한 체감 효과가 없는 것에 반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한옥기술 개발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성과에 대한 체감은 일반 국민들과 유사하게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0여년 동안 한옥의 보급 및 산업화를 위해 약 54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된 한옥 신기술의 민간시장으로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좁고 불편한 한옥의 거주 성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효과성에 대한 홍보방안 모색 필요하다. 또한 한옥을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옥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옥생활의 장점과 자긍심 등에 대한 거주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한옥 거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옥 거주 의향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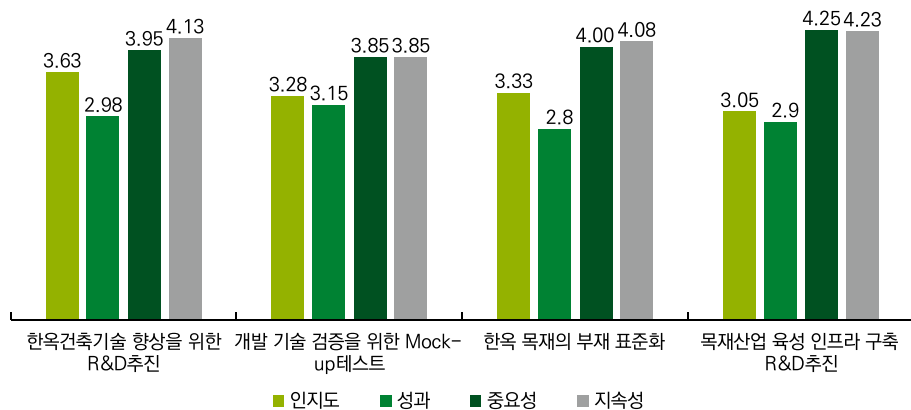
(2013, 2016, 2018, 단위 : %)

출처: auri 국가한옥센터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한옥기술개발에 대한 전문가 인식(전문가 40명, 5점 척도 기준)

출처: 국가한옥센터(2019), 한옥 활성화 정책 성과 점검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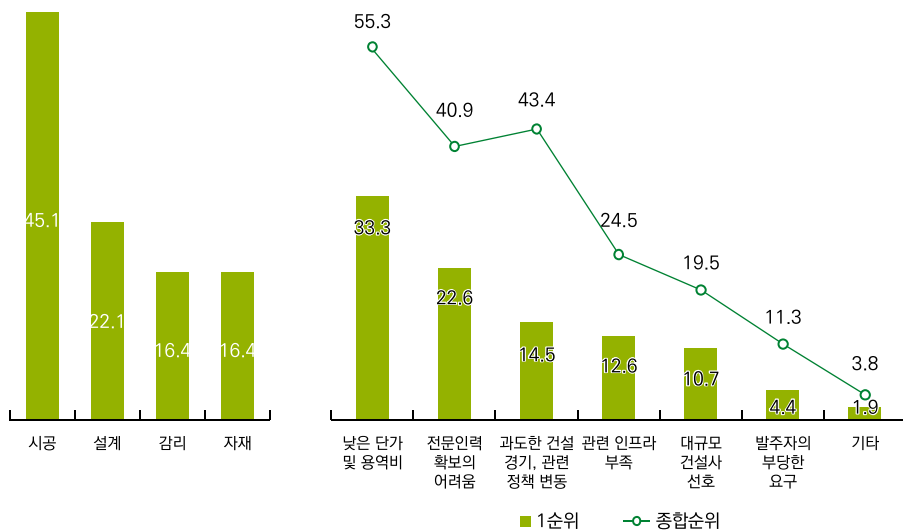
한옥 산업육성 기반 구축 필요

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다년간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019년 국가한옥센터에서 조사한 한옥건축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주력 사업 분야는 시공이 45.1%(72개소)로 가장 많고, 설계 22.1%(35개소), 감리와 자재 각 16.4%(26개소)로 나타났고, 한옥 전문인력 자격증 보유 현황은 기타 한옥 관련 자격증이 170명으로 가장 많고, 건축사 100명, 기술사 64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한옥건축산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옥건축 비용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며, 자생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한옥건축산업 종사자들은 산업 육성·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낮은 단가 및 용역비 외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건설경기 및 관련 정책 변동 등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낮은 단가 및 용역비를 꼽았는데, 한옥 수요자들은 여전히 한옥 건축비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산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한옥건축산업체 입장에서는 한옥건축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 한옥건축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옥건축산업체 일반현황 및 한옥건축산업 육성·발전의 장애요인

(전체 응답자 159명, 중복응답, 단위 : %)



한옥 체험기회 확대

관광 목적이 아닌 생활 속에서 한옥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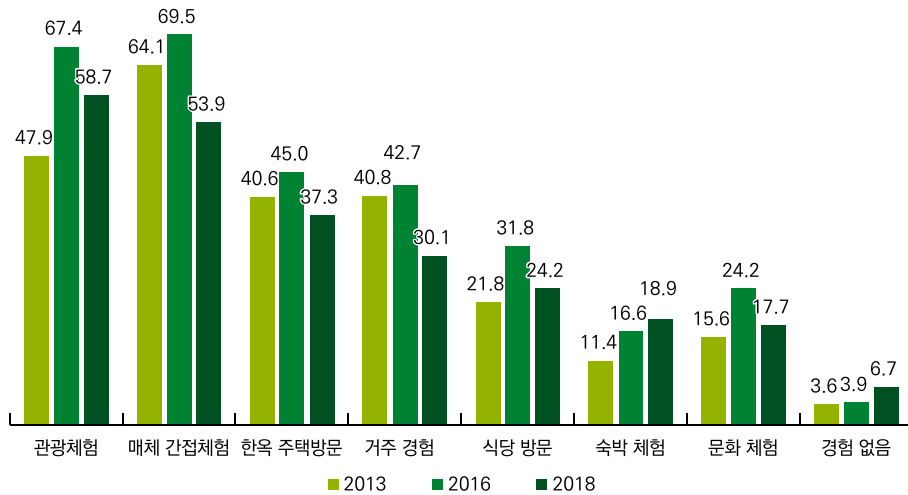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한옥을 활용한 숙박시설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한옥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실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옥을 경험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 및 유명 한옥마을 관광체험을 통해 경험하고 있으며 지인들의 한옥주택을 방문하거나 직접 거주한 경험, 그리고 음식점 또는 숙박체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숙박체험의 경우에는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한옥체험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중 하나로 추가됨에 따라 사업체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비율도 증가되고 있다.

한옥에 대한 경험

(2013, 2016, 2018, 중복응답, 단위 : %)

출처: auri 국가한옥센터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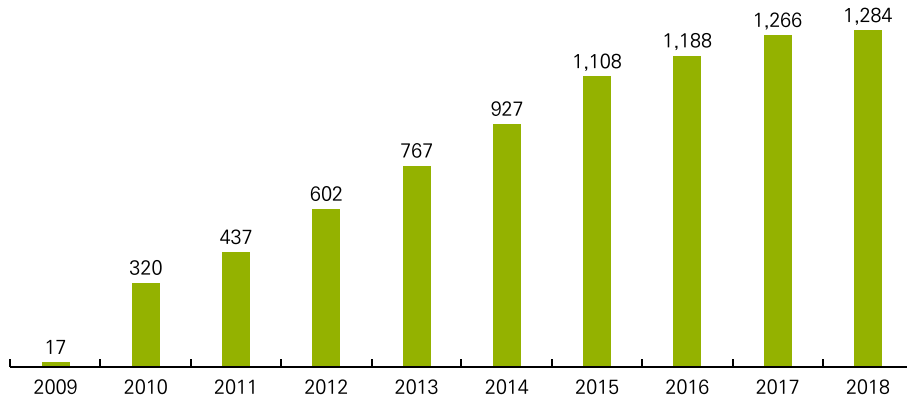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7건에 불과하던 한옥체험업은 2018년 기준 1,284건으로 10년 동안 1,000건 이상의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이용자는 2009년 60,570명에서 매년 점차 증가되어 2018년 1,711,600명이 한옥체험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한옥체험업 사업체 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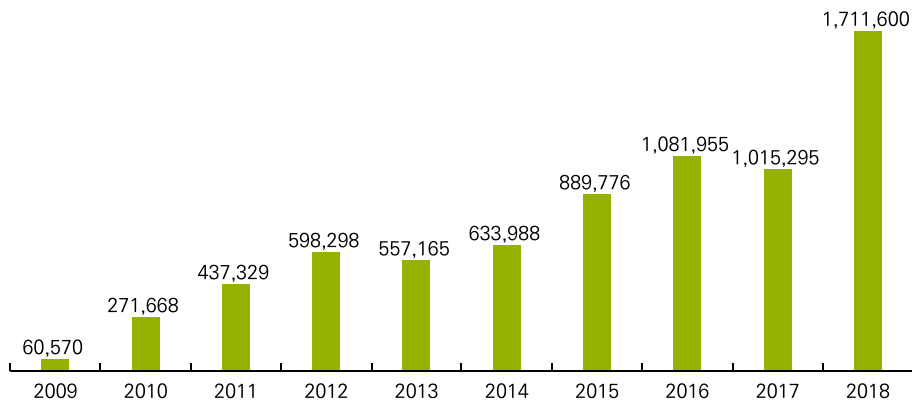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09~2018),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기반으로 정리.



연도별 한옥체험업 이용자 수

(단위 : 명)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09~2018),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기반으로 정리.



한옥을 체험하는 대부분의 경험은 일상에서 손쉽게 접하기보다는 관광지
를 방문하거나 한옥숙박체험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방문해야 한다. 하지

만 한옥의 가치를 공감하거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한옥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손쉽게 방문 가능한 다양한 용도의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조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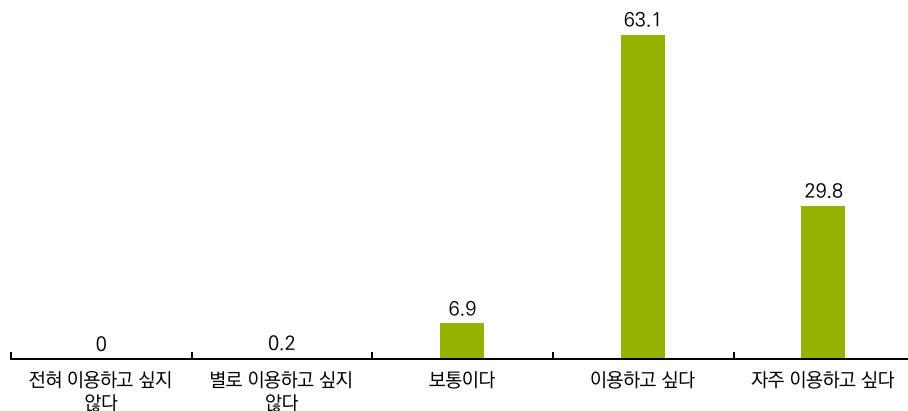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 요구는 많으나 정책 지원은 미흡

한옥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08년부터 지자체 한옥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추진되었고, 33건의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2019년 한옥 공공건축물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자의 92.9%가 재방문 의사를 밝히며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중단(2017년) 이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책 부재하여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옥 공공건축물 방문객의 재방문 의향

(단위 : %)

출처: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 공공건축물 이용자 만족도 조사.



2.

한옥정책이 당면할 여건 변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새로운 트렌드 ‘뉴트로’

2019년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이 급증하면서, 사회문화와 소비 전반에 걸쳐 ‘뉴트로(New-Retro; New-tro)’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게 되었다. 레트로(복고, Retro)가 중장년층이 지난날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이라면 뉴트로에는 과거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옛것에서 신선함을 찾는 것을 말한다. 뉴트로에는 과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빌려 ‘현재’를 파는 것으로, 이를 위해 본질은 유지하되 재해석을 통해 현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뉴트로 트렌드 이미지

출처: 월곡연구소 공식 블로그(<https://m.blog.naver.com/wjrc1858/221585890690>)



이러한 뉴트로에 대한 관심은 건축·도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오래된 공장·창고, 일식가옥, 한옥 등 뉴트로 감성의 장소와 건축물이 각광받고 있으며, 옛 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상업·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이른바 ‘뉴트로 스페이스’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이 증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장소로 익선동 한옥마을과 을지로 공구 상가 일대 등이 있다. 익선동 한옥마을은 조성된 지 100년이 지난 한옥마을로, 옛 한옥을 카페, 음식점, 상점, 슈퍼 등 다양한 상업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뉴트로의 감정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을지로 공구 상가 일대는 일명 ‘힙지로’라고 불리며 소박한 음주문화의 거리로 재탄생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힙지로’로 불리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

출처: 한겨레신문(2019.8.4.), “2030 ‘힙지로’ 열풍-인스타그램 위치 데이터로 입증됐다”





카페로 재탄생한 철강공장
(부산 F1963)



펍으로 뻗신한 한옥
(서울 창신동 크래프트베이스)

소규모 점진적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 따라 대규모 (재)개발은 설득력을 잃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소규모 점진적 개발의 도시 재생·관리 방식이 정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2007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단 출범을 시작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가,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대규모 철거방식의 재개발에서 소규모 정비·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기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의 차이점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http://www.city.go.kr/portal/policyInfo/newDeal/contents02/link.do>)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한옥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잠재되어 있는 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환경적 여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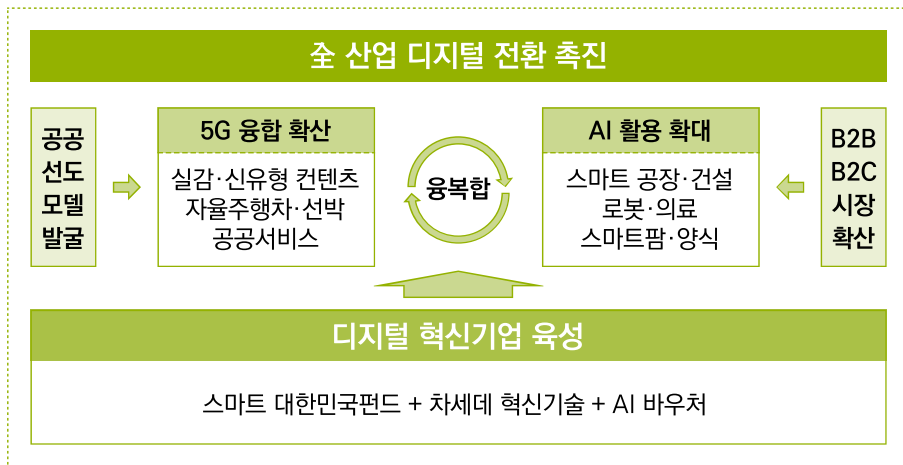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도입·확산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의제로 채택된 이후 전 산업부문에 걸쳐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건축·건설 산업 전반에서도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물리학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등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7월 22일 범정부적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디지털 뉴딜’ 전략을 발표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新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 중 건축과 관련해서는 지능형 건축설계 및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AI 홈서비스 보급 등 ‘스마트건설’, 실감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XR 융합 프로젝트),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全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0.7), 「한국판 뉴딜」 중합계획, p. 54



이에 발맞추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한옥 기술 및 산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발전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옥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2009년부터 한옥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성능개선 및 비용 절감, 설계 및 시공의 편리함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상용화되지는 않은 실정으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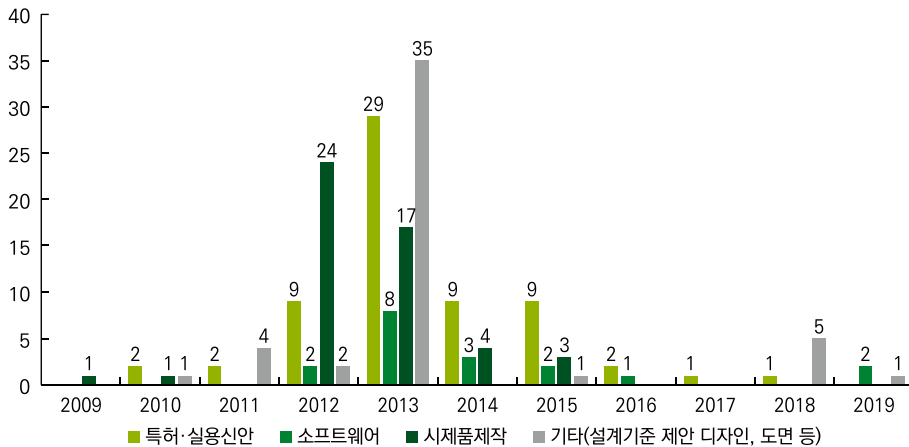
한옥기술개발 국가 R&D 추진 및 성과 확산 필요

한옥을 대중적으로 보급하고 한옥 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옥의 거주 성능 향상 및 건축비 절감 등을 위한 정부 주도의 한옥기술개발R&D 사업이 2009년부터 추진되었다. 2009년 1단계를 시작으로 현재 3단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에서는 전통한옥의 브랜드 가치를 계승하고 현대적 거주 성능이 확보된 저렴한 대중한옥 개발을 추진하였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신한옥 모델의 보급·확산을 위한 신한옥 마을, 기술전시관 및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최적화 모델개발을 위한 실증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기존 한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옥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10m급 대공간 한옥설계 시공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옥기술개발(R&D) 연구사업 관련 성과물 추이

출처: auri 국가한옥센터(2019),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p. 57 [그림 4-5]



하지만 한옥기술개발 성과(특허, 소프트웨어 등) 이전 등을 통한 민간시장 및 산업 시장으로의 보편적 확산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민간시장에 직접 적용되는 사업화 및 제품화는 1단계·2단계 사업에서 총 9건으로 나타났다. 한옥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는 1단계 기술은 모두 공정개선 유형에 속하여, 제품의 직접 개발·생산·판매 외에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목적의 기술이전이 실행되었으며, 한옥 요소기술에 해당하는 ‘당골막이’, ‘프리캐스트 황토 벽체 및 이의 제조방법’, ‘황토구들용 데크패널’, ‘가침 서까래 및

한옥기술개발 사업화/상품화 현황

번호	계약명/사업화내용	실시기관	사업화유형	기매출액 (원)	당해년도 매출액(원)
한옥기술개발 1단계					
1	한옥건축 통합정보시스템 및 3차원 한옥부재 라이브러리 구축	희림종합 건축사사무소	[기술이전] 이전받은 업체공정/공법개선 기타 기술이전		7,000,000
2	한옥통합시공 및 구축기술	(주)명지한옥 산업단	[기술이전] 이전받은 업체공정/공법개선 기술실시		100,000,000
3	한옥통합시공 및 구축기술 계약	(주)한옥마을	[기술이전] 이전받은 업체공정/공법개선 기술실시		198,068,000
4	한식형 기와지붕 구조체 실 시권 설정 계약	(주)양지 종합건설	[기술이전] 이전받은 업체공정/공법개선 기타 기술이전		3,000,000
5	한개미 방재 유화성 목재 유 지관리용 보존제 기술 이전	(주)한캠	[기술이전] 이전받은 업체공정/공법개선 기타 기술이전		3,000,000
한옥기술개발 2단계					
1	복합 여담이 창호	(주)금강 에스지에스	[기술이전] 이전받은 업체 상품화 기타 기술이전		6,000,000
2	영창 교체식 한옥 시스템 창 호와 이의 제조 및 시공방법	(주)티엔디	[기술이전] 이전받은 업체 상품화 기타 기술이전 (공동특허권 이전)	10,000,000	10,000,000
3	한옥 RC 모듈 구축기술	한스코리아	[기술이전] 이전받은 업체 상품화 기술실시		30,000,000
4	신한옥 핵심기술 고도화 및 기준개발	도서출판 기문당	[기술이전] 이전받은 업체 상품화 기술실시		1,800,000

출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옥기술개발 단계별 성과지표, 재구성

이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을 실시 계약의 형태로 기술을 이전하였다. 2단계 기술은 모두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가 제품의 개발·생산·판매를 하는 상품화 유형에 속하며, 한옥 창호 관련 기술 2건, RC 모듈 관련 1건, 한옥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출판권 계약의 상품화가 이루어졌다.

한옥의 보급 및 산업화를 위해 개발된 기술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성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시 적용 확대 및 민간시장으로의 보급·확산을 추진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건축 및 노후 건축물 재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을 착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2025년까지 녹색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총 사업비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추진¹¹⁾을 발표하였다. ‘그린 뉴딜’ 정책은 환경적 측면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경제성장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¹²⁾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130조 달러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린 경제 전환에 뒤쳐질 경우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내 경쟁우위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11) 관계부처 합동(2020.7),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p. 17 참고.

12) 전계서, p. 14 참고.

건축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목조건축물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그린뉴딜의 지속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15년 이상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고단열 벽체 및 창호, 환기시스템, 신재생·신기술 등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더불어 공공건축물 대상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를 조기에 추진¹³⁾하기 위해 건물 에너지 성능 정보제공(건축물 대장 기재) 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¹⁴⁾이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문제가 대두되면서 탄소배출량이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비해 현저히 낮고 탄소저장량이 높은 목조건축물이 주목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고층 목조건축물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산림청에서는 2019년 5월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한 한옥문화를 누려온 우리나라의 목재이용 전통을 현대 목조건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추진 중¹⁵⁾에 있다.

이러한 환경적 여건 변화는 한옥을 보급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현대건축을 기준으로 에너지효율 등을 강조하는 규제 강화로 인해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한옥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 및 기술개발과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13) 국토교통부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newdeal/sub/sub_2_1.jsp.

14) 관계부처 합동(2020.7),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p. 94 참고.

15)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참고. (http://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427&mn=NKFS_04_02_03&nttId=3131637, 검색일 2020년 8월 7일)

정책적 여건변화

한옥 진흥 정책 관련 국정과제

2017년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한옥 진흥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국정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있다. 이는 크게 경제, 문화, 사회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경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경제, 민생경제, 미래형 신사업 발굴·육성 지원을 위해 한옥 진흥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역과 일상에서의 문화, 관광복지 및 관광산업 등 생활문화분야 지원을 위한 한옥 진흥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등을 위한 한옥 진흥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옥 진흥과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더불어 잘사는 경제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중기청)
	5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사업 발굴·육성

국정 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자유와 창익이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문체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국토부·행자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국토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도시재생사업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 활용의 중요성 부각(국토교통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역사·문화자산의 보전·활용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을 지역의 거점 공간으로 정비·활용하는 사업이 증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방치된 한옥이나 창고·공장 등을 지역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건축자산 특화형’ 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활용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양한옥 수리 시범사업 지역

출처: 광양시(2018),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 p.97.



건축물 안전 등을 위한 규제 강화(국토교통부)

화재,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해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강화, 화재안전성능 강화, 제고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축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 및 강화되는 건축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옥의 건축 행위는 점점 어려워질 전망으로 이에 대한

기술개발, 대체성능 기준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7년 10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한옥주택 건축의 어려움이 발생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전통목구조”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제정된 구조기준은 모든 한옥에 적용 가능한 사항이 아니어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한옥주택 이외에도 전통한옥에서 벗어난 형태 및 구조의 한옥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화구조 기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BF인증 기준 등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전통목구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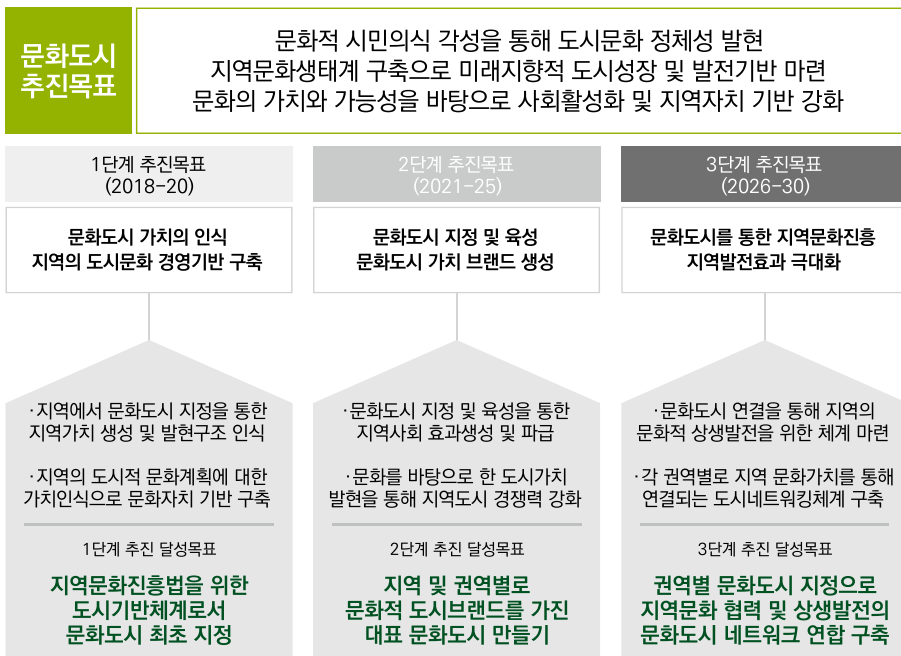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KDS 41 80 32 : 2019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2019년 10월 25일 제정 http://www.kcas.go.kr	
KC CODE	
국토교통부	
목 차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및 적용조건	1
1.3 참고기준	2
1.4 용어의 정의	2
1.5 기호의 정의	2
1.6 설계도서	3
2. 조사 및 계획	3
3. 재료	3
3.1 구조용 목재 및 목질판재	3
3.2 기타 재료	4
4. 설계	6
4.1 서까래	6
4.2 추녀	11
4.3 대들보	13
4.4 종보	28
4.5 지붕도리	36
4.6 바닥도리	50
4.7 바닥	63
4.8 기둥	66
4.9 접합부	71
4.10 전단벽체	74
4.11 기초 및 바닥슬래브	90
4.12 동가 단면 환산표	95

관광콘텐츠 및 생활문화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충(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옥 진흥 정책과 관련하여 한류, 역사·문화 등 한국 고유의 문화자연유산 등의 활용·지원 사업 및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창출 등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1차 문화도시 7개소를 지정하였고, 2019년~2022년 총 30곳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도시별 최대 5년 간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업과 연계하여 한옥 진흥을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거점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도시 단계별 추진목표 구성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4.), '20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p.6.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확대(문화재청)

문화재청에서는 정책대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자원을 발굴 및 보존·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전국의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 하여 활용을 통한 보존 역량을 극대화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근현대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지구 등 선·면 단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보존·활용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후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내 문화재 및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지역은 5년 동안 매년 국비 20억~50억 원을 지원하며,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보존기반 조성사업, 문화재 활용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한옥은 지역의 경관을 구성하는 경관적 가치와 주민들의 생활사를 보여줄 수 있는 생활사적 가치,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대표적 유형인 역사적·건축적 가치 등 역사문화자원으로써 가치가 있다. 한옥을 보전하고 보급 활성화 하는데 있어, 문화재청의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정책과의 연계 가능한 방안 모색을 통해 한옥 진흥 정책의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정책 추진 사례로 2015년부터 추진한 4개 고도지역(공주, 부여, 경주, 익산)에 대한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들 수 있다. 문화재청에서 추진한 사업의 대부분은 기존 가치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추진한 것인데 반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은 고도지구 내 고풍스러운 경관조성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지정지구 내 고도의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개축·수선할 경우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4개 지역에 한옥건축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한옥건축을 통해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으로 변화된 공주시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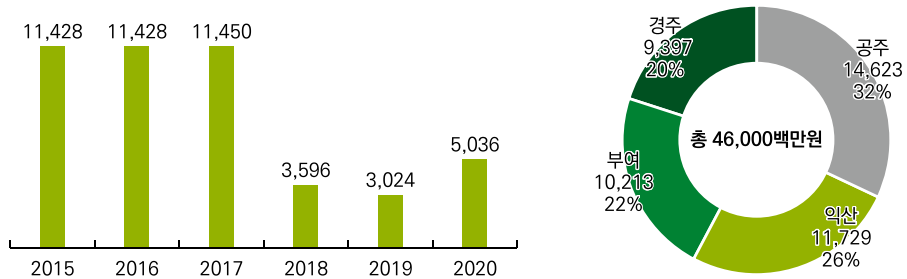
출처: 문화재청(2019.10.),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추진현황.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연도별·지역별 예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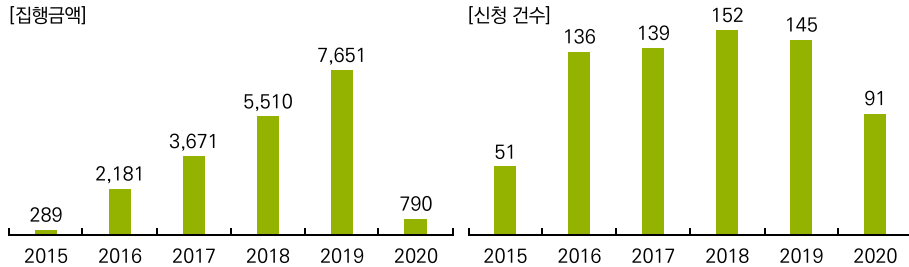
출처: 문화재청(2020.7.),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추진현황.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연도별 집행금액 및 신청 건수

(단위 : 백만원, 건)

출처: 문화재청(2020.7.),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추진현황.



목조건축 확산 및 산업육성(산림청)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목재자원 보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었으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목재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인증·인정제도 도입 등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2012년 5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3년 5월 시행하였다. 법률에 의거하여 2015년에는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종합계획(2015-2019)’을 수립하였고, 2019년에는 국내 목재산업을 확대하고 산림(목재)자원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목조건축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무상보급, 건축비 지원 등)하고, 목재소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건립하는 방안, 목조건

축 고층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관련 규정 합리화, 목재유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목재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목재정보센터’ 구축, 목재공동구매 제도 도입, 목재안전성 우수제품 등록 등의 소비자를 위한 정책 방안, 목재소비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의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옥은 넓게 바라보면 목조건축의 한 유형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한옥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목재유통체계 구축 및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층 목조건축물 1층에 조성된 공유공간



국내 최초 5층 목조건축물로 건립된 한그린 목조관(경북 영주시)



한옥정책, 앞으로의 10년을 **그리다**.

1.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역할 강화, “한옥 건축이 편리해지다”
2. 현대건축과의 만남, “한옥의 업역을 확대하다”
3. 한옥 공공건축물의 보급·확산, “한옥의 체험기회를 확대하다”
4. 한옥건축기준 및 성능 합리화, “한옥의 품격과 품질을 제고하다”

A large, bold, white number '10' is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Below it, a dark teal shadow of the number is cast, creating a 3D effect. The background is a solid teal color.

1.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역할 강화

“한옥 건축이 편리해지다”

지난 10년간 한옥 정책이 추진되면서, 공공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한옥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반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사비에 대한 공공차원의 지원 또는 저금리 융자 등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공공의 역할에 힘입어 한 해 평균 건축된 한옥의 절반 이상이 공공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 동안 한옥 건축 활성화 측면에서 공공이 제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공공지원 없이는 한옥 건축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정책, 특히 진흥정책의 경우에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첫 번째 단계는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한옥은 2010년 신한옥플랜에 따라 명확히 정책대상이 되었으며,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의 법적 정의부터 한옥 건축특례 등이 마련되었으며, 2015년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2010년부터 지속적인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선도모델을 조성하여 한옥을 보전·활용함과 동시에 보급·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기존 한옥마을을 보전·활용하는 선도모델로서는 서울의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등이 있으며, 신규 한옥마을 보급·확산에서는 은평 한옥마을과 전남 행

북마을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현대의 주거성능을 확보하고 현대건축 기술을 적극 도입한 ‘신한옥’이 국가연구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되면서 은평한옥마을 내 화경당을 비롯하여 총 11건의 실증사례가 구축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책을 확산하고 활성화하는 단계이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한옥 진흥 정책을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한옥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서울과 경북에서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옥 공공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100동의 한옥 공공건축물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 한옥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를 통해 한옥 정책 및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네 번째 단계는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되는 단계이다. 이는 공공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 개입과 지원하에 자생적으로 민간부문이 활성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10년간 한옥은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견인하였다. 앞으로의 10년은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고민할 때이다.

진흥정책의 4단계(기반마련-선도모델 구축-정책확산 및 활성화-민간활성화)로 한옥정책의 지난 10년을 돌이켜 본 결과, 이제는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고민할 때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한옥 정책의 현주소와 한옥이 당면할 여건변화는 이 고민을 해결할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한옥의 높은 건축비와 겨울철 추위 등 단열성능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옥건축은 여전히 쉽게 취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국

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에서 실시한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제1장에서 살펴본 지난 10년간의 한옥정책 추진현황과 성과와 사뭇 다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옥기술개발연구단과 함께 3.3㎡당 678만원의 건축공사비와 함께 단열성능을 갖춘 신한옥을 개발하였으며, 은평한옥마을 내에 시범한옥인 ‘화경당’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반 국민 인식과 정책 성과 간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주요한 요인으로는 ‘정책 성과의 확산 및 소통 부족’을 들 수 있다. 일부 정책적 성과가 바로 일반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적 성과, 특히 ‘기술’에 관련된 성과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형·응용되어야 만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한옥건축기술이 많이 개발된 것은 분명한 성과로 볼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성과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얼마나 많이 보급·확산되었는가로 보여져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마찬가지이다. 한옥 전문인력을 몇 명 양성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옥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한옥의 품격과 품질이 제고되고 있는지, 일반 국민이 한옥 건축 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0년간 정책성과 창출에 힘썼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그 간 정책성과를 토대로 일반 국민, 산업계에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정책을 관장하는 공공과 일반국민 또는 산업계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역할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축적되어 온 정책적 성과 중 한옥 기술개발과 한옥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옥건축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옥 건축의 수요-공급 비매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옥 거주여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 3명은 한옥에 살고 싶어 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 측면에서 결코 작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옥건축산업 실태조사 결과, 산업계에서는 한옥 건축 건수가 없으며, 한옥 설계·시공업체가 낮은 단가 및 용역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옥건축시장의 공급 측면에서는 작은 시장 규모, 불합리한 이익구조 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옥건축시장 수요-공급의 불균형 속에서 공공은 이를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정책은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과 공급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각각 개별적으로 바라보고 추진되거나 둘 중 하나를 추진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성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된 경향이 있다. 한옥 또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부분과 공급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거나 한 쪽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어 나머지 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쫓아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이 추진되었다. 즉 수요와 공급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거나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진흥정책의 4단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옥 정책이 지난 10년간 추진된 성과를 토대로 민간부문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역할’을 강화하여 현재 한옥건축시장

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고, 그간 정책 성과를 토대로 ‘편리하게’ 한옥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옥정책의 주요한 추진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역할을 강화하여 한옥 건축이 편리해진다면, 현재의 수요-공급 비매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옥건축이 활성화 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2.

현대건축과의 만남

“한옥의 업역을 확대하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을 정의하고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한옥 건축 기준」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일부 주요 구조부재를 목재로 유지하면서 전체 구조부재 수의 15% 미만을 목재가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구조부재의 결구 또한 전통방식뿐만 아니라 철물접합 등 현대 건축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은 그 정의가 점차 확대되었다.

한옥의 정의 및 건축기준은 공공으로부터의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즉 법률 상의 한옥의 정의와 건축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특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옥 건축공사비와 수선비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법률에서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축특례 적용과 각종 지원을 통해 보전·활용하거나 보급·확산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象)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한옥의 정의와 건축기준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여전히 한옥의 정의와 건축기준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구조부재의 주요 재료가 ‘목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목재가 가지는 재료의 특성이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한옥 건축물이 건축되는 실정이다. 콘크리트 한옥,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한옥의 수직 또는 수평적 복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건축물이 한옥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어 각종 건축특례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옥과 관련된 정의가 하나 더 있다. ‘한옥건축양식’이 그것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으로 한옥건축양식을 정의하고 있다. 즉 한옥의 정의나 건축기준에서 고수되고 있는 구조 재료뿐만 아니라 형태와 구조 등에서 현대 건축기술을 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옥건축양식’ 또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2.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보급 사업
3.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옥건축양식’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한 실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옥건축양식이 법률에는 정의되어 있지만, 그 정의가 구체적인 정책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에서 ‘한옥건축양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것은 한옥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즉 한옥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현대 건축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한국적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한옥건축양식 유형 예시

유형	설명	대표사례	비고
현대한옥	목구조에 보, 기둥, 한식지붕틀을 갖춘 현대한옥	 <p>출처: https://dsm0506.blog.me 출처: https://kkogong2.blog.me (좌: 캐틀앤비 황남관점, 우: 안국동 어니언카페)</p>	한옥정의에 부합
하이브리드 한옥	한옥과 비한옥이 하나의 건축물로 결합된 형태	 <p>출처: https://joopokey.blog.me 출처: 구가도시건축(© 윤준환) (좌: 청운문학도서관, 우: 함양재)</p>	한옥건축양식

유형	설명	대표사례	비고
한옥품 한옥	현대건축물에 전통 요소를 일부 반영	  <p>출처: https://picacco.blog.me 출처: BBS News (좌: 스타벅스 문경세재점, 우: 서울진각중 전승원)</p>	한옥건축양식
정통한옥	목구조에 보, 기둥, 한식지붕틀을 갖춘 전형적인 한옥	  <p>출처: https://army2521.blog.me 출처: https://hsh200313.blog.me (좌: 화천한옥학교, 우: 한국가구박물관)</p>	한옥정의에 부합
콘크리트 한옥	각 부분의 비례가 한옥의 비례를 준수 하였으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한 건축물	  <p>출처: https://yuxi686.blog.me 출처: https://mary990308.blog.me (좌: 청와대 본관, 우: 현충원 현충문)</p>	한옥건축양식
한류한옥	와관과 실내에 전통 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추상화한 건축물	  <p>출처: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출처: 연합뉴스 (좌: 국립국악원, 우: 몬트리올 엑스포 한국관)</p>	한옥건축양식

하지만 지난 10년의 한옥정책을 되돌아보았을 때, 한옥정책의 주요 대상은 ‘한옥’이었다.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건축특례가 만들어졌으며 공공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건축물로서 한옥이 건축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에서 조사하고 있는 ‘한옥 인허가 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옥은 총 9,727채, 한 해 평균 1,080채 건축되는 실정이다. 한옥 한 채의 평균 건축공사비를 3억원으로 어림잡아 계산하여도 한 해 3,240억원으로 소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을까? 이는 한옥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산업적 가치보다는 문화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옥은 한국을 대표하여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건축문화이며,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건축·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옥 정책의 첫 번째 10년에서는 ‘한옥’의 보전 및 활용, 보급 및 확산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이는 한옥이 본격적인 정책적 대상으로 설정된 초기에 당연한 정책 초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 초점을 가지고 지난 10년간 한옥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를 토대로 두 번째 10년을 보내게 될 한옥 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기술개발, 정책 등이 추진된 것은 단순히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옥의 가치확산’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옥 건축 활성화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현대건축과

의 융·복합을 통해 한옥의 가치를 확산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한옥에 현대적 건축요소와 건축기술을 접목시켜 현대인에게 주거유형의 대안으로서 선택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현대건축에 한옥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한옥정책이 본질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되었던 한옥정책이 본질적인 목표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옥이 본격적으로 정책대상으로 여겨지고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한옥’에 초점을 두어 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의 정책 성과는 앞으로의 10년 동안 한옥의 가치 확산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건축·도시공간을 조성하는 한옥정책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됨이 바람직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한옥 정책은 ‘한옥의 가치확산’과 ‘한국 고유 정체성을 간직한 건축·도시공간 조성’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대에 조성되는 다양한 건축·도시공간에 한옥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용어로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아직까지는 ‘한옥건축양식’에 대해 정책대상으로서의 구체적인 상(象)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10년 동안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옥건축양식은 한옥의 업역을 넓혀 나가는 것으로서 한옥 정책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한옥건축산업의 대상을 현대건축으로까지 넓혀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한옥건축양식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옥 설계요소 발굴’, ‘한옥건축양식 우수사례 발굴’, ‘한옥건축양식 확산을 위한 지원수단 마련’을 세부실천과제로 선정하였다. ‘한옥 설계요소 발굴’은 한옥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유형의 한옥건축양식 확산을 위해 한옥의 구조, 재료, 형태 등 한옥 공간의 디자인 및 특성을 주요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옥건축양식 우수사례 발굴’은 한옥건축양식 모델 개발 연구와 함께 공모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조성하고, 한옥건축양식의 설계·시공 권장사항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옥건축양식 확산을 위한 지원수단 마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옥의 가치를 한옥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까지 보다 폭넓게 확산하기 위해 한옥건축양식 유형화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한옥의 가치를 계승하면서 현대적인 생활편의성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한옥건축양식 모델을 개발하여, 한옥의 가치확산과 한옥산업의 외연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책대상으로서 한옥건축의 범주를 확대하고,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한옥건축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향후에는 한옥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3.

한옥 공공건축물의 보급·확산,

“한옥의 체험기회를 확대하다”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의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에서 한옥 거주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옥의 호감도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를 한옥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한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보다 경험한 사람이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난다. 즉 한옥을 경험하는 것은 한옥 호감도와 거주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옥을 경험하는 것 중에서도 한옥 거주 경험, 한옥 주택 방문 및 숙박체험 경험 등 한옥에 대한 직접 경험이 한옥 호감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옥에 대한 직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한옥에 대한 호감도와 거주의향을 높이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직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한옥 공공건축물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다.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옥 활용 가치 증대를 위해 가장 적합한 한옥의 용도로 ‘문화시설’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거주지역 내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84.3%로 나타나 한옥 공공건축물의 보급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반 공공건축물과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한 결과,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이 약 3배 높게 나타나 지역 주민이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옥 공공건축물을 보급·확산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한옥 체험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침체되어 있는 한옥 건축 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옥 정책은 ‘주택’ 용도에 초점을 두어 추진되었다. 민간부문에서의 한옥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택’ 용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한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신한옥형 교육시설 실증구축 사례(서울 성북구 정수초등학교)

출처: 서울시교육청. (2020). 학교와 전통건축이 만나 ‘한옥교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11월 3일 보도자료



최근 2020년 11월에 서울 성북구 정수초등학교 내 한옥교실이 준공되었다. 한옥기술개발연구단에서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한옥 신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학교에 한옥교실을 건축하였다. 정수초등학교 내 한옥교실은 한옥 기술개발연구단에서 추진되었던 실증사업과 달리, 기존 건축물(학교)과 연계하여 한옥을 건축하였다. 이는 한옥 공공건축물을 조성함에 있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 내 있는 한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옥을 접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다양한 용도의 한옥을 보급하기 위해 ‘한옥 신기술 자문단 및 협의체 운영’과 ‘한옥(형) 공공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을 세부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옥의 저변을 확대함과 동시에 한옥건축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용도의 한옥을 보급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한옥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한옥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첫 번째 세부실천과제는 ‘한옥 신기술 자문단 및 협의체 운영’이다. 이는 2009년부터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한옥 신기술을 응용하고 공유함으로써, 한옥의 구조와 재료에 따른 단위공간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용도의 한옥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세부실천과제는 한옥(형) 공공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옥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관, 주민센터 등 지역밀착형 생활시설을 한옥(형)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했던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그 대상을 한옥건축양식으로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4.

한옥건축기준 및 성능 합리화

“한옥의 품격과 품질을 제고하다”

여건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물의 탄소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에너지 성능 기준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2020년 7월 14일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그린 뉴딜’이 포함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제까지 한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제26조제5호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는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계승하고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지만, 한옥이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등 친환경 녹색건축물로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위에서 언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은 아니다. 2009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을 통해 현대건축으로서 갖추어야 할 한옥의 단열, 기밀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기술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현대건축이 목표로 하는 에너지 성능은 아니더라도 현재보다는 한 층 향상된 한옥만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옥은 과거 특정 시대의 건축양식이 아니다. 한옥은 연간 약 1,000채 정도 건축되고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여전히 현재에도 유효한 건축물이다. 이는 한옥을 찾는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가 언제까지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의 수요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차원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한옥’ 그 자체가 좋은 ‘제품’이어야 한다.

한옥이 ‘좋은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한옥이 고유하게 갖추고 있는 ‘품격’뿐만 아니라 ‘품질’도 우수해질 필요가 있다. 한옥의 품격과 품질에 대해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고시된 ‘한옥 건축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2015년 12월 21에 고시된 ‘한옥 건축 기준’에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야기되었던 ‘한옥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즉 ‘한옥 건축 기준’은 법률 시행 초기에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건축의 범주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한옥 건축 기준이 고시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미흡하게 다루어져 왔던 ‘성능’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옥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옥기술개발연구단에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관련된 신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신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총 11건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간시장에서는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에는 그간 개발되고 검증되었던 한옥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옥의 품격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옥 건축 기준과 한옥 신기술의 보급·확산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실제 한옥건축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2019년부터 재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총 6차례 추진된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총 996명(설계과정 828명, 시공관리자 과정 167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가차원의 자격제도가 부재하여 단순히 한옥을 설계하고 시공하기 위한 직업능력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향후에는 한옥의 품격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차원의 자격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한옥의 품격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옥 산업 전문성 강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마련’, ‘한옥건축기술지원센터 지정 및 설립’을 세부추진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마련’은 한옥건축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자격제도 등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한옥건축기술지원센터 지정 및 설립’은 한옥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높은 건축비, 현대적 생활 불편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및 한옥(예비)건축주를 대상으로 설계·시공에 대한 컨설팅 등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부 록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

* 2020년 12월 21일에 고시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74호)'의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I

계획의 기본방향

1. 건축자산과 한옥의 주요 정책이슈

□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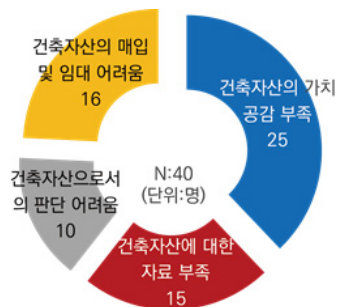
한옥과 건축자산 정책의 핵심 대상을 설정하고, 건축자산 보존·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련 주체의 협력·지원체계 구축

- (정책 대상) 건축자산 개념을 명확히 하여 정책·사업 추진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한옥과 건축자산의 위계를 명확히 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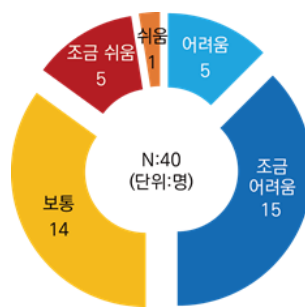
* 건축자산, 한옥, 한옥건축양식 등 관련 개념의 불명확성과 통계구축 기반 미흡 등이 건축자산 정책 추진의 어려움으로 제기

- (가치 공감) 건축자산이 가지는 역사성, 정체성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감·공유할 수 있는 가치 인식 제고 노력 필요

건축자산 보존·활용 사업 추진의 어려움



건축자산 개념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



- **(협력 체계)** 중앙 지원-지역 주도의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부처 간 협업, 민관협력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참여 확대 필요
- **(지원 주체)** 지역과 현장 중심의 건축자산 진흥정책을 선도·유도·지원할 수 있는 지원 주체 역할 제고 필요

정책 기반 마련과 관련한 법령 및 제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구분	법령 및 실천과제	세부내용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2조(정의)	건축자산, 한옥, 한옥건축양식의 정의 규정
	제5조(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마다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역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조사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지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운영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지역의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 마련·추진
	제33조(교육 및 홍보)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노력
	제34조(민간단체 지원·육성)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제1차 기본계획	건축자산 기초통계 및 관리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자산 조사 실시 지원 • 기초통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건축자산 기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화 프로그램 • 철거위기 건축자산 기록화 사업
	건축자산 가치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자산 용어 정리 • 건축자산 유형 및 가치 특성 연구 • 건축자산 인문학 기반 모색
	우수 건축자산 활용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건축자산 MAP 발간 • 우수건축자산 사례발굴
	참여형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주도형 건축자산 교육 • 건축자산 담당 공무원 교육

□ 현장 중심의 건축자산 가치 증진 실천수단 모색 필요

무분별한 훼손·멸실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서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실효성을 갖춘 현장 중심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

- **(멸실 방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지역 건축자산의 무분별한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적 대책 마련 시급
- **(선도 모델)**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의 정책 효과를 공감·확산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도모델을 조성할 필요
 - * 전국적으로 우수건축자산 등록 건수 12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건수는 4건으로 관련 정책·사업 추진 성과 미흡
- **(주체간 연계)** 소유자, 활용자,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건축자산과 관련한 주체간의 연계를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기술 및 인력)**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점차적 수요 증대로 건축자산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
 - * 건축자산은 신축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안전 및 에너지 성능 강화 등의 건축 관련 기준 강화도 함께 고려될 필요

가치증진 실천수단과 관련한 법령 및 제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구분	법령 및 실천과제	세부내용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건축자산 유지·보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노력
	제9조(건축자산 사업자 지원)	건축자산 유지·보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등	우수 건축자산 등록, 공용 건축자산 특례, 우수 건축자산 지원 및 관리, 우수 건축자산 법령 특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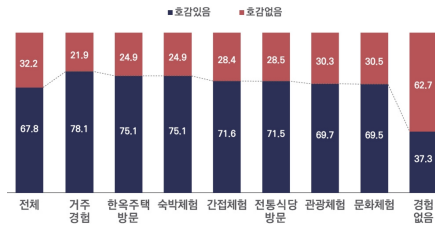
구분	법령 및 실천과제	세부내용
제1차 기본계획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 계획 수립, 진흥구역 내 건축물 특례,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진흥구역 협의체 구성 등
	건축자산 기초통계 및 관리기반 구축	• 건축자산 관리 강화
	지원 및 활용 다각화 정책 연구	• 건축자산 산업동향 조사 • 우수 건축자산 등록 지원 • 우수 건축자산 활용 활성화 방안
	건축자산 보전·활용 기술개발	• 우수 건축자산 관련 기술기준 마련
	산업화 기반 조성	•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공공 우수건축자산 지원	• 공공 소유 우수건축자산 등록 • 공공 우수건축자산 증·개축 지원사업 추진 • 공적활용 사업모델 구축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	• 건축자산 진흥구역 시범사업 •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과 연계한 건축자산 진흥	• 도시재생사업 연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고도와의 연계

□ 한옥의 현대화와 확산을 위한 유도·지원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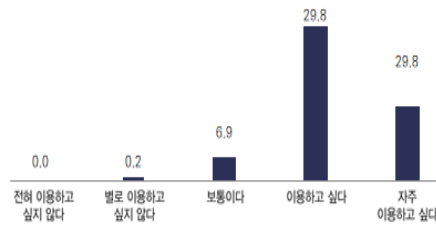
그간 추진된 기술개발의 상용화 및 세부기술·기준 마련과 함께 생활 속 한옥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한옥 수요를 창출하고 한옥산업 활성화 도모

- **(신기술)** 그간 추진된 한옥 R&D 성과를 확산하고 건축비 부담 경감, 친환경건축, 안전관리 등 한옥의 건축적 취약성 개선 필요
- **(한옥 체험)** 한옥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확대하고 수요 창출을 위해 다양한 건축양식과 한옥(형) 공공건축물을 통한 체험기회 확대

한옥 경험에 따른 호감도 차이(auri, 2018)



한옥 공공건축물 방문객의 재방문 의향(auri, 2019)>



- (산업 생태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장 여건 개선 필요

* 한옥산업 종사자 대상 산업동향 조사결과 한옥건축산업 육성 장애요인으로 '낮은
 단가 및 용역비(55.3%)',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22.6%)'을 많이 선택

한옥 현대화·확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구분	법령 및 실천과제	세부내용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24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기술지원 및 보조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정비 지원 등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 특례)	건축법, 녹색건축법, 민법 등의 특례
	제29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인력양성 우수기관 인증 등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한옥 및 한옥관련 산업 지원·육성, 한옥 관련 사업 지원
	제31조(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한옥건축양식 보급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차 기본계획	특화형 한옥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활용 한옥마을 조성 • 문화재 주변구역 한옥마을 조성방안 마련 • 한옥마을 선도사업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용도의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 주민 공동이용시설 한옥 활성화 기반 구축

구분	법령 및 실천과제	세부내용
제1차 기본계획	한옥 건축비용 및 자산가치 평가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 건축비 기준 개발 • 한옥 감정평가 개선
	전통 기술의 계승 및 현대화 산업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들 등 전통기술 현대화 • 대공간·다층형 한옥 기술개발 • 한옥 성능 기준 마련 • 지역별 클러스터 조성 추진

2. 건축자산과 한옥 진흥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

□ 건축자산과 한옥 진흥정책의 추진 시점 차이 고려

○ 건축자산 진흥정책은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15.06.) 및 ‘제1차 건축자산 진흥기본계획’ 수립(’15.12.) 이후 5년이 경과된 반면,

- 한옥 진흥정책은 한옥기술개발사업(’09~’21), ‘국격 향상을 위한 新 한옥플랜’ 대통령 보고(’10.05.) 등 10년 이상 경과

* 한옥의 기반마련 및 선도모델 구축 단계는 어느 정도 정책 효과를 도출하였으나, 건축자산은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

○ 진흥정책의 추진단계를 기반마련-선도모델 구축-정책 확산 및 활성화

- 민간부문 활성화의 4단계로 구분하여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 건축자산 보유 현황 및 한옥 진흥정책 실태 조사 선행 필요

건축자산, 한옥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기반마련	선도모델 구축 (시범사업 등)	정책 확산 및 활성화	민간 활성화
건축자산	정책	- 건축자산 기초조사 수행 및 시행계획 수립 - 지자체 조례 제·개정	- 지자체 건축자산 활용 공모사업	- 우수건축자산 등록 12건 - 건축자산 진흥구역 3건	- 기존 건축을 재활용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
	산업				
	교육 홍보			-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한옥	정책	- 한옥 건축특례, 관련 법 개정 - 지자체 조례 제·개정	- 한옥마을 조성 -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 한옥 신축 및 개보수 비용지원 - 일부 지자체 한옥지원센터 운영	- 민간 한옥학교 운영
	산업	- 국가 R&D 한옥 신기술 개발	- 국가R&D 실증사업	-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 홍보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대학생 한옥캠프 등 운영		- 한옥 관련 박람회 개최 -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여건변화		- 건축 안전 및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문체부) 문화도시 등 '건축자산'과 관련된 사업 추진	- (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	- 뉴트로, 소규모 점진적 개발 등 사회경제적 변화

□ 건축자산 분야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설정

- 기반마련 단계에서는 정책부문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이를 토대로 선
도모델 구축-정책 확산-민간부문 활성화로 정책 수준 단계적 확대
-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공신
력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건축자산 가치 확산 및 대국민 인식제고
- 기술·환경변화에 따른 기술개발 및 대체 성능 기준 마련, 선도모델 조
성 등 실질적 사업추진 및 성과 창출로 정책 확대
- 이와 동시에 정책 지원수단의 현행화와 실효성 제고를 통해 건축자산 보
전·활용에 대한 민간시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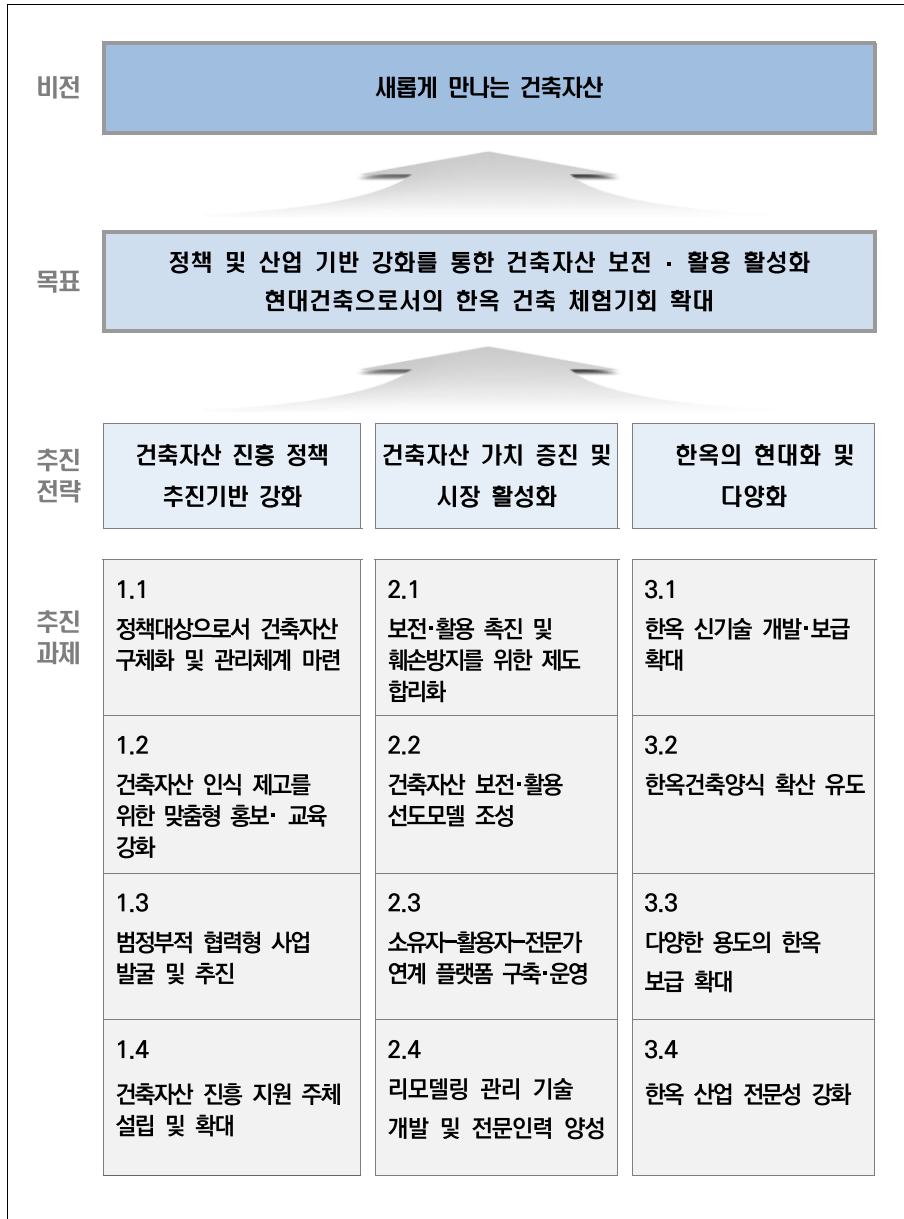
□ 한옥 분야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 설정

- 지난 10년간 기반마련, 선도모델 구축 정책·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정책 확산 및 활성화,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정책, 산업, 교육홍보와 관련된 기반마련, 선도모델 구축 단계에서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수요-공급 불균형 등 산업구조 개선 추진
- 그간 추진된 R&D사업을 통해 검증된 한옥 신기술을 보급·확산하고, 한옥 체험기회 확대 및 민간부문 활성화 도모에 집중

건축자산, 한옥 진흥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

		기반마련	선도모델 구축 (시범사업 등)	정책 확산 및 활성화	민간 활성화
건축자산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자산 기반마련 시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건축자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지침수단 이행화 및 실효성 제고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환경변화에 따른 기술개발 및 대체 성능 기준 마련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확산 및 인식제고 			
한옥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 건축특례, 관련 법 개정 - 지자체 조례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마을 조성 -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일부 지자체 한옥건축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공급 등 산업구조 불균형 해소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R&D 한옥 신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R&D 실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신기술 확산 - 한옥학교 운영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대학생 한옥캠프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 관련 박람회 개최 -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 체험기회 확대
여건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안전 및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문체부) 문화도시 등 '건축자산'과 관련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트로, 소규모 점진적 개발 등 사회경제적 변화

3. 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의 관계

제1차 기본계획 실천과제		진행상황	제2차 기본계획 실천과제 중 관련 과제	세부 내용
건축자산 총조사 지원	건축자산 기초통계 및 관리기반 구축	이행완료 1건 부분이행 2건 미 이행 1건	정책대상으로서 건축자산 구체화 및 관리체계 개선	기초조사 지원 강화
	건축자산 기록화	이행완료 1건 미 이행 1건	건축자산 진흥 지원주체 설립 및 확대	건축자산 지원기구 설립
건축자산 기초연구	건축자산 가치 발굴 연구	부분이행 2건 미 이행 1건	정책대상으로서 건축자산 구체화 및 관리체계 개선	건축자산의 법적·정책적 범위 구체화
	지원 및 활용 다각화 정책 연구	부분이행 3건	건축자산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우수건축자산 사례 발굴
국민 공감 확산	우수건축자산 활용 다양한 콘텐츠 개발	부분이행 2건	건축자산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우수건축자산 사례 발굴
	참여형 교육 실시	이행완료 1건 부분이행 2건	건축자산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국립 도시건축 박물관과 연계	이행완료 1건	건축자산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도시건축박물관 등 건축자산 홍보 거점 마련
한옥 조성 확대	특화형 한옥마을 조성	이행완료 1건 부분이행 2건	한옥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한옥 설계요소 개발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활성화	이행완료 1건 미 이행 1건	한옥(형) 공공건축물 보급·확대	한옥 공공건축 시범사업 추진
	한옥 건축비용 및 자산가치 평가 합리화	부분이행 1건 미 이행 1건	한옥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한옥건축 부재 표준화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건축자산 보전·활용 기술개발	미 이행 1건	리모델링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건축자산 유형별 리모델링 기술 개발
	전통 기술의 계승 및 현대화	부분이행 3건	한옥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한옥건축 부재 표준화
	산업화 기반 조성	부분이행 1건 미 이행 1건	리모델링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한옥 전문인력 육성·지원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추진 한옥 전문인력 육성·확대 등
건축자산 활용 선도	공공 우수건축자산 지원	부분이행 1건 미 이행 2건	건축자산 보전·활용 선도모델 조성	우수건축자산 보전·활용 시범사업 추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	미 이행 2건	건축자산 보전·활용 선도모델 조성 건축자산 진흥 지원주체 설립 및 확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정비 지원 거점별 건축자산 지원조직 운영
	관련 사업과 연계한 건축자산 진흥	이행완료 1건 부분이행 1건	범정부적 협력형 사업 발굴 및 추진	정부부처간 협력형 사업모델 개발·추진

II

전략별 추진과제

1.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기반 강화

1-1. 정책대상으로서 건축자산 구체화 및 관리체계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정책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건축자산에 대한 효과적 지원 및 관리를 도모할 필요
 - 광역시·도의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는 보전 가치에 대한 신뢰성 및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 본격적인 정책대상으로의 한계
 - 보전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축 자산의 가치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 필요
-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련 기초 통계를 구축하여 실증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수립의 근간 마련

□ 세부 실천과제

- (건축자산 범위 구체화) 시·도지사가 정책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등재 절차 및 관리기준 마련
 - 시·도지사가 (가칭)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동의를 거쳐 건축자산을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정의) 개정 및 등재절차 관련 규정 신설 추진

-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가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연구 추진
-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 건축자산 기초조사 추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시행
 -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 기초조사 애플리케이션의 보급 확대, 조사인력 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지원
 - 국가 차원에서 기초조사 및 학술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시행 시 재정 지원 추진
- * 특정 시기 또는 유형의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 **(건축자산 통계 구축)** 시·도별 건축자산 현황 및 인·허가, 건축자산 관련 산업 등에 대한 통계 생산 기획 및 구축
 -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을 법적 정보체계로서의 위상을 확립* 하고 건축자산 현황 파악 및 통계 생산 효율성 제고 도모
- * 「한옥등건축자산법」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건축자산 인·허가, 현황 등을 국가승인통계로 승격 추진
- **(전문위원회 설치)**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의 전문성 강화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시·도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 법제화
 - 건축자산과 관련된 심의* 시 해당 심의위원회에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위원 참여 또는 자문 역할을 담당하도록 법제도 개선
- *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른 주요 심의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른 주요 심의

사안		심의주체	근거조항(진흥법)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광역건축위원회(「건축기본법」 제18조)	제5조제2항
우수 건축 자산	등록(비용 지원)	시·도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	제10조제2항
	특례 적용(건축허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건축위원회	제14조제3항
건축 자산 진흥 구역	지정	시·도 공동심의위원회 - 건축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7조제1항
	관리계획 결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공동심의위원회	제1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6항 (※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1-2. 건축자산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건축자산에 대한 홍보 및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대국민 인식을 제고할 필요

* 건축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는 국민의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

-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도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을 확산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 및 사업 추진 도모 필요

□ 세부 실천과제

- (홍보 콘텐츠 개발) 건축자산의 가치와 시대적 변화상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여 역사적 가치 보존 및 홍보 콘텐츠 개발·활용

- 철거(방치) 위기에 놓인 건축자산의 사진, 도면, 학술조사 자료 등을 디지털 아카이빙하여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 기록 실시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증강현실(AR) 등 건축자산 관련 가상 체험 콘텐츠 개발
- **(우수사례 발굴)** ‘(가칭)올해의 우수 건축자산 대상’을 신설 또는 기존 건축상*과 연계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및 시상하고 적극 홍보
 - * 문체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등
 - 보전 및 활용이 우수한 건축자산의 관계자(건축가, 시공자, 건축주)를 시상 및 홍보하고,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일반인, 공무원, 건축자산 소유주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지역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사·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 시민자치대학, 주민센터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방과 후 학습, 동아리 활동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 추진
 -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인재개발원 등에 강좌를 개설하여 건축자산 실무 기본 지식 배양
 - 건축자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해당 자산 활용 방안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축자산 보전 공감대 형성
- **(건축자산 홍보 거점 마련)** 국립도시건축박물관(‘25년 개관 예정) 및 지역 박물관·전시관 등을 건축자산 홍보 거점으로 활용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내 건축자산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기획 및 관련 연구사업 추진
- 건축자산 진흥구역 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별 건축자산 교육·홍보 거점시설* 운영 지원
 - * 건축자산 아카이브, 교육·홍보 등을 위해 지역 박물관·전시관 등을 건축자산 홍보 거점시설로 조성

1-3 범정부적 협력형 사업 발굴 및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여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정책과 연계 가능한 지역개발 및 건축자산 활용 사업 증가하고 있으나,
 - 유관 사업에서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건축자산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거나 멸실되는 우려 지속
- 건축자산 진흥 관련 유관 부처 및 지자체 정책·사업 간 연계를 통해 정책 시너지 창출과 범정부 추진 확산을 도모할 필요

□ 세부 실천과제

- (부처간 협력형 시범사업 추진)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유관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사업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 연계사업 예시: (문화부) 유희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농림부) 어촌뉴딜300 등

-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확대)**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을 확대 선정(1개소 → 3개소)하고,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사업비 집행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 *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 추진
- **(협력체계 구축)**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구성된 건축자산 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제도·사업 개선과제 발굴

1-4 건축자산 진흥 지원주체 설립 및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건축자산 보전·활용 정책의 주된 실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지원 조직 부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
- 건축자산 진흥정책 실행 및 지원 주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증진을 도모할 필요
- 정책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관련 사업자와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필요

□ 세부 실천과제

- **(국가센터 역할 확대)** 건축자산 진흥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한옥센터의 역할 확대

- 기존 ‘국가한옥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건축자산 분야까지 확대한 ‘(가칭)국가한옥등건축자산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한옥등건축자산법」에 국가한옥등건축자산센터 설치를 위한 규정 신설

- (권역별 건축자산 지원조직 운영) 광역 또는 건축자산 거점 지자체에서 권역별 건축자산 진흥시책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신설 운영

- 지역 건축자산센터 설립 타당성 및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지자체가 지정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건축자산 관련 민간주체 활성화)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및 법인·단체*의 육성·지원

* 건축자산 유지·보수 및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조사·연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2. 건축자산 가치 증진 및 시장 활성화

2-1 보전·활용 촉진 및 훼손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 배경 및 필요성

- 건축자산의 가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보전·활용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도수단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자산 보전·활용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및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세부 실천과제

- **(인센티브 강화)**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조세 감면을 현실화하고 관리·소요비용 지원 확대 추진하여 건물주의 건축자산 관리 유도

* 우수건축자산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제도 합리화)** 건축자산의 건축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건축규제 합리화 및 건축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 건축자산 규제 합리화를 위한 결합건축, 건축협정 등 「건축법」 및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 추진

- **(지역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보급)** 지역 개발 및 정비 사업 추진 시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내용) 건축자산 기초조사 시행, 건축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사업추진 절차, 제도적 관리수단, 참여 주체별 역할 규정 등

- **(건축자산 진흥 특별회계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건축자산특별회계 재원의 다양화 방안 검토 및 법제도 개선

* 건축 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을 건축자산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 추진 검토

2-2 건축자산 보전·활용 선도모델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 등 제반 여건이 미흡한 실정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

* 우수건축자산 활용 사례는 1건(서울생활문화센터_체부),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완료 지역은 2곳(대구 향촌동, 서울 북촌)에 불과

- 중앙정부 차원의 마중물 지원을 통해 선도모델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자산 보전·활용 사업 확대를 견인할 필요

□ 세부 실천과제

- **(우수 건축자산 보전·활용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에서 우수건축자산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 2차 기본계획 기간('21~'25) 동안 전국 17개 시·도별 1개 이상 우수 건축자산 리모델링 및 활용 추진(매년 3~4개소)
 -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건축자산의 리모델링 과정 및 활용성과를 모니터링하여 모범사례 확산 유도
- **(건축자산 진흥구역 정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재정 지원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완료 후 공공부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매년 1~2개소)

2-3 소유자·활용자·전문가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건축자산 정보와 실제 활용을 원하는 수요자에게 연결될 수 있는 매개체 형성 필요
 - * 수요-공급 불일치, 관련 정보 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 실정

- 건축자산의 소유자 또는 활용주체가 건축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및 정보 접근성 개선 필요

* 건축자산은 전문업역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설계 및 시공 분야의 명확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어려운 실정

-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촉진 및 민간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련 주체 간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역할을 강화할 필요

□ 세부 실천과제

-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 활용 활성화)** 건축자산 기초조사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해 건축자산 소유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 개선

- **(건축자산 우수 사업체 정보 구축)**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에 관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사업체를 발굴하여 수요자에게 정보 제공

- **(건축자산 플랫폼 구축·운영)** 소유자-활용주체-전문가 상호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한옥 짓는법 등 정보 제공을 위한 한옥 플랫폼(추진전략 3-4)과 연계 구축

2-4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배경 및 필요성

- 건축자산의 가치 보존과 향후 활용을 고려한 시설 조성은 고도의 리모델링 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합리적 성능 기준 개발 필요

* 유효한 건축물로서 건축자산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대에 요구되는 안전,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충족시키거나 별도의 기준 마련 시급

- 건축자산의 가치 보존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건축자산 설계 및 시공 분야에서 문화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세부 실천과제

- (건축자산 리모델링 등 기술 개발) 건축자산의 유형별 리모델링 기법 연구와 안전 및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합리적 성능기준 마련) 건축자산 리모델링 시 피난, 내화 및 소방,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대체 기준 또는 성능확보 방안 마련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완화적용 특례 중 동등 이상의 성능 확보가 요구되는 사항

법률명	특례 조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건축자산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사후관리 시행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절차 및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한옥등건축자산법」에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추진

- 건축 관련 종사자(건축사, 시공자 등)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설계 및 시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고 전문가 인증 제도* 운영

- 배출된 건축자산 전문인력은 건축자산 플랫폼에 등록하여 건축자산의 리모델링, 기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영국의 경우 비정부 공공기관인 히스토리 잉글랜드(Historic England)가 William Morris Craft Fellowship, Canal and Rivers Trust, Prince's foundation 등이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건물보존 공인건축가(AABC), 공인엔지니어(CARE) 등 건물보존 전문가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운영 중

3. 한옥의 현대화 및 다양화

3-1 한옥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08년부터 추진된 한옥기술개발 연구사업(R&D)을 통해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 및 현대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 현대 거주에 적합한 단열, 기밀, 내진성능 등의 기술개발, 10m급 대공간 한옥기술, 한옥자동화설계프로그램 개발 등(특허·실용신안 64건, 시제품 50건 등)

- 기 개발한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현대적 성능기술을 개발하여 한옥 산업에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한옥건축 생태계 구축

□ 세부 실천과제

- (한옥 부재 표준화) 건축공사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 부재 표준화를 통해 공사비 절감 및 한옥의 대중화 도모
 - 전통과 현대기법에 적용 가능한 기둥-도리-보 등 주요 목재 부재의 표준화 연구 및 한옥 부재 유통체계 구축방안 마련
- (친환경 및 방재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기준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구조, 화재분야 등의 성능향상 기술 개발
- (목조건축 연계사업 추진)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산림청)과 연계*하여 한옥 건축 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
 - * 귀농·귀촌 목조주택 건축비 지원, 공공부문 국산목재 활용 촉진, 고층 목조건축 기술 개발, 목조건축지원센터 설립 등 목조건축물 활성화 사업 등

3-2 한옥건축양식 확산 유도

□ 배경 및 필요성

- 한옥의 가치 확산과 한옥산업 외연 확대를 위해 한옥의 전통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생활 편의성을 갖춘 한옥건축양식* 확산 필요
 - * 한옥건축양식 :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제3호)
- 정책대상으로서 한옥건축의 범주를 확대하고, 신기술 등을 통해 한옥건축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한옥 진흥정책의 심화 및 발전 도모

□ 세부 실천과제

- (한옥 설계요소 발굴) 한옥의 구조, 재료, 형태 등 한옥건축의 디자인 및 특성을 드러내는 한옥건축양식 설계요소 발굴
- (한옥건축양식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 시범사업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한옥건축양식 유형화 연구 추진
- (한옥건축양식 지원수단 마련) ‘한옥건축양식’ 유형화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옥건축양식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수단 마련
 - 건축양식 유형별 설계·시공 권장사항 등의 가이드라인 작성 및 보급

한옥건축양식 유형 예시



유형1: 현대건축+한옥



유형2: 한옥풍 건축



유형3: 콘크리트 한옥



유형4: 한류 건축

3-3 다양한 용도의 한옥 보급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한옥의 저변 확대 및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한옥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
- 한옥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주거용 한옥뿐만 아니라 장기체류, 생활 체험 등이 가능한 다양한 용도의 한옥 보급·지원 필요

□ 세부 실천과제

- **(한옥건축 자문단 및 협의체 운영)** 중앙정부-지자체의 한옥(형)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설계·시공 자문단* 및 신기술 협의체 운영
* 한옥신기술 개발 참여 업체, 한옥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료생 등이 참여
- **(한옥(형)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추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시설*을 한옥(형)으로 조성하고 장기체류형 체험시설** 확충
*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체육관, 주민센터 등
** 시민들에게 1-2년 단위로 주거용 한옥을 임대하여 장기간 한옥 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한옥으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 공공한옥' 29개소 운영 중
- **(한옥 지원기준 합리화)** 주거 중심의 지원 대상을 비주거용 한옥으로 확대하기 위해 용도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15년) 개정 추진

3-4 한옥 산업 전문성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한옥건축 품질 제고 및 신기술 확산 등을 통한 한옥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
-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현장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세부 실천과제

-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마련)**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한옥건축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자격제도 운영
 - 한옥건축 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하고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
- **(한옥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한옥 (예비)건축주가 손쉽게 관련 전문가·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한옥건축기술지원센터 지정·설립)** 한옥 (예비)건축주를 대상으로 한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 기술 지원
 - * 한옥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높은 건축비와 현대적 생활의 어려움 등을 해결할 방안을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제시하고, 입주 후 시기별·부위별 유지관리 지원

III

실행체계

1.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기반의 정책 추진체계 정착

○ 정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국가)-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지자체)-사업추진(현장)의 추진체계 정착

-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 제시
-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건축자산 기초조사 등 관련 정책 추진

○ 2차 기본계획 시행에 맞추어 지역별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 점검 및 지원 강화

- 중앙-광역 협의체 등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공유,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독려, 기 수립 시행계획 조정 등 추진
-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건축공간연구원)을 활용하여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지원

□ 중점 추진과제 설정 및 성과지표 기반의 정책 추진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실천과제 중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 선정

- 중점 추진과제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의 실천과제로 포함하여 과제 추진현황을 중점 관리
-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기본계획 시행 3년차('23년)까지 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구축 완료
-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2년 주기로 성과측정 실시
 - 성과지표는 과제 성격에 따라 이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정하고 성과측정 세부기준 마련
 - **(2년차)** 중간점검 실시 및 미흡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시행
 - **(4년차)** 성과측정 실시 및 미흡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중앙 지원-지자체 실행·관리의 정책 추진체계 정립

- 건축자산 추진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 **(구성)**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광역시) 건축자산 소관 부서
 - **(역할)**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제도·사업 개선 과제 발굴
 - **(운영)** 연 1~2회 정기회의 개최 (필요 시 임시회의 추가 개최)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중심의 건축자산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 건축공간연구원, LH 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 (역할) 부처 및 기관 협력형 사업모델 발굴·추진, 지자체 지원방안 모색 등
- (운영) 연 1회 정기회의 개최 및 사무국 운영(건축공간연구원)
 - * 필요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협력체계 강화 추진

□ 시민과 민간이 함께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정착

- (시민)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홍보·교육 자료를 발간·확충하고, 학교,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교육 추진
- (민간단체) 한옥, 건축자산과 관련한 민간 차원의 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세부 지원방안 마련, 근거법령 개정 추진
- (기업)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활동 참여 독려 및 우수사례 홍보 추진

□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 등 개정

- 기본계획의 실천과제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기본계획 1년차에 「한옥 등 건축자산법」개정을 통해 우선 추진
 - 법령 개정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정부 연구용역 시행 및 연구기관 자체 연구·사업과 연계 추진
 - 제도개선 과제는 기본계획 시행 2년차까지 추진 완료 목표
- 지역 차원의 한옥 등 건축자산 정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조례 등의 제정 가속화

- 조례 등 제정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표준 조례안을 마련·제시
- 건축자산 추진협의체 등을 통해 지자체별 조례 등 제정 상황 점검, 애로사항 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 추진

2.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기반 강화

추진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기간					주관부처 (협조기관)
		'21	'22	'23	'24	'25	
1-1. 정책대상으로서 건축자산 구체화 및 관리체계 마련	• 건축자산의 법적·정책적 범위 구체화						국토교통부
	•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	체계 구축	지원 시행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건축자산 통계 구축				국토교통부		
	• 지자체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1-2. 건축자산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 건축자산 홍보 콘텐츠 개발				국토교통부		
	• 건축자산 우수사례 발굴	체계 구축	시행·확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개발	시행			국토교통부	
	• 도시건축박물관 등 건축자산 홍보거점 마련	기획	거점지정 및 지원			국토교통부 (행복청)	
1-3. 범정부적 협력형 사업 발굴 및 추진	• 중앙부처간 협력형 사업모델 개발·추진	모델 개발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기획	확대·모니터링			국토교통부	
	•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구축	운영·확대			국토교통부	
1-4. 건축자산 진흥 지원주체 설립 및 확대	• 국가한옥센터의 건축자산 역할 확대	확대	운영			국토교통부	
	• 권역별 건축자산 지원조직 운영			기획	운영·확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건축자산 관련 민간주체 활성화	기획	지원·확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건축자산 가치 증진 및 시장 활성화

세부실천과제	기간					주관부처 (협조기관)
	'21	'22	'23	'24	'25	
2-1. 보전·활용 촉진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 우수건축자산 보전·활용 인센티브 강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건축자산에 대한 법규 적용 합리화					국토교통부
	•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지역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국토교통부 (행안부, 문체부, 문화재청, 산림청)
	• 건축자산 진흥 특별회계 실효성 확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2-2. 건축자산 보전·활용 선도모델 조성	• 우수건축자산 보전·활용 시범사업 추진	기획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건축자산 진흥구역 정비 지원		기획	지원 시행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2-3. 소유자·활용자· 전문가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	• 건축자산 기초조사 체계 개선 및 조사결과 활용 추진	체계 개선		조사결과 활용		국토교통부
	• 건축자산 관련 우수 사업체 정보 구축		구축	활용·확대		국토교통부
	• 온라인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구축		운영		국토교통부
2-4.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건축자산 유형별 리모델링 기술 개발			기획	개발	국토교통부 (KAIA)
	• 건축자산의 합리적 성능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추진		기획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옥의 현대화 및 다양화

세부실천과제		기간					주관부처 (협조기관)
		'21	'22	'23	'24	'25	
3-1. 한옥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 한옥건축 부재 표준화						국토교통부 (산림청, KAIA)
	• 친환경 및 방재기술 개발						국토교통부 (KAIA)
	• 목조건축 활성화 연계사업 추진		기획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 (산림청)
3-2. 한옥건축 양식 확산 유도	• 한옥 설계요소 개발						국토교통부
	• 한옥건축양식 우수사례 발굴	기획		발굴·확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한옥건축양식 확산을 위한 지원수단 마련						국토교통부
3-3. 다양한 용도의 한옥 보급 확대	• 한옥 신기술 자문단 및 협의체 운영	구성		운영			국토교통부
	• 한옥 공공건축 조성 시범사업 추진		체계 구축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한옥 지원기준 합리화						국토교통부
3-4. 한옥 산업 전문성 강화	• 한옥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자격제도 마련						국토교통부
	• 한옥 전문가·소비자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		구축		운영		국토교통부
	• 한옥건축기술지원센터 지정 및 설립						국토교통부

한옥정책,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펴낸이 박소현
엮은이 국가한옥센터
지은이 이종민, 이민경, 김종범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홈페이지 www.auri.re.kr
디자인·제작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ISBN 979-11-5659-307-2

비매품

© 2020,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 이 책의 저작권은 건축공간연구원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은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 www.aur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